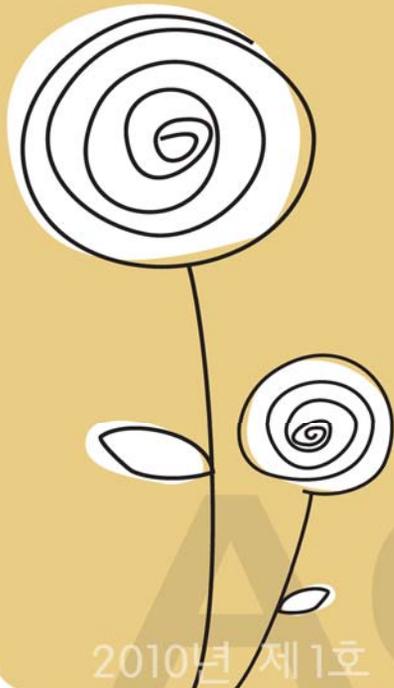


진보네트워크센터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 ACT ON

정보운동 액트 ACT



ACT ON

2010년 제 1호



HUMAN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왜 그들만 자유를 누리나요?"

전파,
남산 그리고 우리동네.

ACT ON

정보운동 액트온 | Act On

**“왜 그들만 자유를 누리나요?”
전파, 남산 그리고 우리동네.**

통권 제8호 | 2010년 제1호

코드 : 잉여剩餘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조 섞인 농담부터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다루는 학술 영역까지 가로지르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잉여剩餘'라는 단어를 꼽을 것입니다.

잉여는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소여所與라는 말의 반대말처럼 느껴집니다. 소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변형되고 가공되는 것이라면, 요즘 사용되는 잉여는 가공했으나 시장에서 실패한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인간 문명의 발전이 잉여 생산물을 통해 가능했다는 그 옛 잉여가 아닌,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고 사람들의 욕망도 자극하지 못하는 쓰레기로서의, 현대의 잉여.

잉여라는 말의 다양한 용법을 봅시다. "잉여질 했다"는 "뭔가 해야 하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놀았다"이고, 사회적으로 보기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이들을 보고 "잉여배틀한다" 합니다. 여러 잉여의 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사회에서 주체/주류 놀이에 배제된 이들의 씁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학술적 논의는 더 나아가 산업 예비군으로서의 잉여노동력이란 옛 개념을 구석에 몰며 "시민이 아닌 자", "배제되어야 할 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라는 개념을 위해 잉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잉여는 정상(?)으로의 복귀를 예비하는 유예기간이 아닌 낙인이자 적극적인 배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잉여일까요? 당신은 잉여입니까? 권력은, 자본은, 미디어는 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강요함으로써 삶에 끊이지 않는 불안을 심어두려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질문의 효과는 강력해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그리되어선 안 된다'하며 이 세계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역설적으로 아직도 잉여는 이 사회가 발전하게끔, 회전하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잉여는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소여所與입니다. 잉여의 시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생산은 머지않아 잉여가 되어 쓰레기통에 쳐 박히고, 다시 새로운 생산과 새로운 욕망을 창출하라는 시대의 사명 속에 허우적됩니다. 이 버거운 순환에 대해 잠시 멈춰서 생각 해 봅시다. 우리 잉여짓 한번 해 봅시다.



laron : @picotera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ActOn

통권 제8호 | 2010년 제1호

발행일 2010년 4월 2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희
편집인	라론
편집	라론
사진	박김형준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picotera@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본 정보운동 ActOn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www.freeuse.or.kr/license/2.0/yg

표지의 벡터 이미지는 Dryicons(<http://dryicons.com>)의 이미지를 사용했음을 밝혀둡니다.

차례

통권 제8호 | 2010년 제1호

“왜 그들만 자유를 누리나요?” 전파, 남산 그리고 우리동네.

코드 : 잉여剩餘_라론 ∩ 3

section 01. 모두에게 달혀있는 전파 ∩ 7

전파는 인권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활용_조동원 ∩ 8

해외의 진보적 전파 활용 사례_강진원 ∩ 22

section 10. 기고 글 모음 ^ 37

쓰레기가 되는 삶들_장여경 ^ 38

1987 광주구장 대 미스터리_강진원 ^ 41

낙서 실명제_장여경 ^ 46

section 11. 진보넷의 고민들 ^ 51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 권력전쟁_정민경 ^ 52

진보넷의 고민 : 함께 해 주세요~_김승욱 ^ 57

진보넷 이종회 대표 면회기_김승욱 ^ 64

section 01. 모두에게 달혀있는 전파

- 전파는인권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활용
_조동원 ^ 8
- 해외의 진보적 전파 활용 사례_강진원 ^ 22

section 01.에는 지난 3월 23일 문화연대에서 진행된 “뽀뽀한 미디어 농장 9차 포럼 : 전파의 진보적 활용-2. 전파는 인권이다?!”에서 발표된 두 개의 원고를 심습니다. 내용의 간단한 수정이 이루어졌고 새로이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전파는 인권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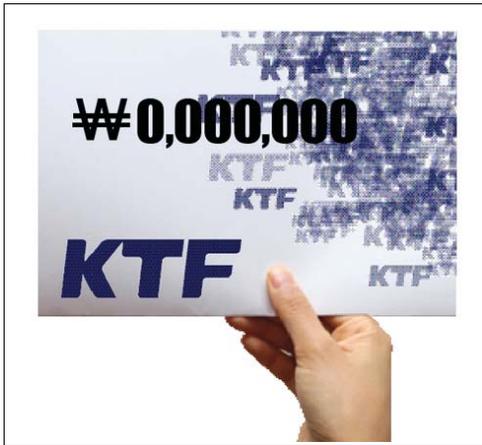


조동원 dongwon@riseup.net
@unnetworking

1. 전파 : '황금'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보기

언제부터인가 '황금주파수'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전파가 파장을 그리며 진행하면서 산이나 고층건물 등의 장애물을 넘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회절성은 그 진동횟수(주파수)가 낮을수록 강한데, 그 저주파 대역인 1GHz 이하의 700, 800, 900MHz에 '황금주파수' 라는 말이 붙여진 것이다. 2010년 3월 현재 800~900MHz와 2.1GHz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고 있고 800~900MHz 대역을 할당받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10년간 사용하게 된다. 또 하나의 '황금주파수' 인 700MHz는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 TV 방송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면서(2012년

12월 31일)비워 이동통신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그 재배치의 방식이 곧 경매제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의 근거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특정 주파수 대역이 이동통신에 유리하다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별칭이 암시하듯 이동통신 사업을 통한 무지막지한 경제적 수익을 의미한다. 이는 이동통신 기업들이 챙기는, 모든 비용을 빼고 남는 순수한 이윤이 연간 무려 1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통해 잘 나타난다.¹ 전파는 노다지가 되었고(황금주파수), 전파 정책까지 돈 놓고 돈 먹는 장삿속으로 넘어가고(경매제) 있다.



< 이 정도는 되어야 경매에 참가 가능! >

이미지출처 : 미디어 미래 연구소, <http://www.mfi.re.kr/>

하지만 전파는 오랫동안 공공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적 하부구조의 기반이었다. 신문에는 공영신문이 없는 반면, 이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만, 방송에는 공익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있어온 이유도 그것에 있다. 방송이 갖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인 전파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방송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국가를 매개로 전파의 독점적 이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방송의 책임이 부여받아왔다. 그러한 법적 규제의 핵심 논리는 전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파가 희소하고, 따라서 아무나 막 쓰게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공유지의 비극’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익’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방송면허)을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² 1920년대 이래 모든 나라에서 방송 전파는 원리적으로 공중의

1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영기 교수 '이통사 초과이익 1조 8천 억'.” 2009년 9월 21일.

2 1920년대 방송제도가 시작될 당시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Adrian Johns, 2009.

소유지만 특정한 주체에 신탁한다는 개념 하에 통제되어 왔다.

그러나 전파의 자연적인 속성이라고 했던 전파의 간섭 현상은 적어도 디지털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기술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고 전파는 희소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인터넷의 최초 설계를 디자인한 3인방 중의 한 명인 리드(David Reed) 교수는 무선 전파는 빛(광자)과 같이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서로를 투과하는 따라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³ 하지만 종종 라디오가 지지직 거리고 휴대 전화가 혼신되는 일이 실제로 있지 않은가? 그것은 전파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수신기가 정보를 제대로 분리해 수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드는 이러한 전파 간섭 현상의 허구적 성격을 1900년대 전파에 대한 ‘나쁜 과학’의 문제로 보면서 이 나쁜 과학은 단지 수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송신기-수신기, 그 네트워크 전체의 시스템 설계의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젊은 시절의 David P Reed, Wikipedia>

그래서 적어도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압축 및 전송 기술의 발달로 그러한 전파 간섭과 인위적인 희소성의 문제(제한된 양의 정보 전달의 한계)는 점차 극복되어왔다. 무선 전화에서는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과 같은 압축 전송 기술이 그렇고, 우리가 무선 인터넷을 할 때 사용하는 와이파이(WiFi) 역시 공유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다. 특정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대역을 찾아 사용하다가 다시 그 대역의 원래 이용 신호가 나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지무선통신(CR, Cognitive Radio) 기술도 발달해있다.

제한적이거나 아이폰의 출시 과정의 진통과 출시 후의 변화가 잘 암시해주듯이, 노다지를 캐고 있는 이동통신 기업들이 막아서고 있지만 1대1, 1대다,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모두가 가능한 똑똑한 송수신기가 널리 개발 보급되면 우리는 전파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 전파의 사용 역시 배타적 독점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다.

“Piracy as a Business Force,” *Culture Machine Vol .10: Pirate Philosophy*.

3 David Weinberger, “The myth of interference,” *salon.com*, 12 March 2003.

더 나아가 전파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따라서 전파는 희소하지 않다는 것은 국가가 전파를 독점하면서 배타적으로 소수의 방송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만 허가하는 정책 체계가 사실상 그 근거를 잃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은 전파 기술의 변화에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전파의 이용은 이미 가능하지만, 누군가 공공 자산의 독점, 그것도 합법적인 법제도를 통해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면 쉽게 바뀔 리 없다. 시장논리와 사유 재산의 형태로 전파의 희소성은 다시금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박한 전파의 디지털 전환과 경매 등의 재분배의 문제는 기술(결정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문제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와 함께 전파의 군사적인 활용의 문제가 있다. 군사적 목적으로 상당수의 주파수 대역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전파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조차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안보라는 이유가 앞서 있지만 실상 전쟁무기산업의 독점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군사 안보를 위한 공공 자원의 활용도 국회를 통해서든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⁴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전파의 문제는 이제 인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원리에 내몰리며 그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공익 규제의 명분이 사문화되면서, 전파를 통한 사적이고 공적인 정보의 교환,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대한 접근과 참여에 필수적인 하부구조가 당연히 보편적인 누릴 권리가 더 이상 아니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주창자이자 법학자인 모글렌 교수는 전파의 문제를 사상·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본다. 그는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전파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통제 방식을 유지” 해 온 것은 곧 “누가 다수 대중에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와 같은 “전파 분배는 이제 악이 되는 때가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⁵ 그러면서 그는 자유전파운동(free spectrum)을 소개하는데, 이는 마치 검열에 맞서는 비허가 출판 운동과 같은 것으로, 수백 년에 걸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인권으로서의 전파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차원에서 전파 자원의 활용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한다.

4 [뻘뻘한 미디어농장] 8회 포럼. "전파의 진보적 활용1: 방송주파수 재배치." 2010년 2월 18일 토론 내용 참조.

5 Eben Moglen, 2004. "Die Gedanken Sind Frei: Free Software and the Struggle for Free Thought." Wizards of OS 3, Opening Keynote.

2.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전파 활용

2.1. 커뮤니케이션 권리

급격한 기술적 발전에 의해 미디어 간의 경계,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미디어의 기술적 구분과 콘텐츠 장르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와 그 현실적 실현을 위한 문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1970년대 이후 제기되고 발전되어온 ‘커뮤니케이션권’ (right to communicate) 혹은 ‘커뮤니케이션 권리’ (communication rights) 개념에 주목할 만하다.⁶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기왕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여 누구나 어떠한 억압과 착취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권이자 집단권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을 말한다. 근대 자본주의 시대가 형성되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표현의 자유는 (매스) 미디어 제도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를 소유하고 제작하고 운영하는 전문적인 소수에 의해 전유되거나 제약되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때, 여전히 그 개념이 갖는 유용성의 토대 위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미디어 민주화’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었던 조건과 구조로는 실현하기 힘든 ‘미디어 민주주의’ 즉, 대중들의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하고 구현할 수 있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 형식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마치 보통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과 자원의 사회적 공유와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권리의 다양한 이념들이 현재의 기술·문화적 수준에 상응하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은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이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인간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필수적인데, 따라서 커뮤니케

6 보다 자세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이론, 역사, 운동에 대한 논의로 박승관, 1985, “커뮤니케이션권(The Right to Communicate)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일 고찰.”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석사논문: 미디어트 1회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 미디어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4년 3월 23일; CRIS 캠페인, 2007, [커뮤니케이션 권리 핸드북]. 미디어트 ACT! 편집위원회 옮김, 미디어트 등 참조.

이선과 관련된 권리는 특히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자유, 참여, 다양성, 존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인간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로서 이미 세계인권선언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종합하면서도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권리 운동이 제기되어온 것이다.

2.2.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활용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3가지 접근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자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현대 사회의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파를 이용한 방송과 통신 등의 제반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환경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이어지며 전파 자원은 이러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편적 정보 접근과 공동체 미디어를 위해 전파가 활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이라면,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필요와 목적으로 전파 자원 자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역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술 문화 환경에 맞게 전파 자원 자체를 모두가 자율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전파 자원의 개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 각각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 포함해 좀 더 설명해보고자 한다.

-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활용
-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활용
- 전파 자원의 자율적 공유와 활용 구조

3.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 활용

3.1.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전파 자원

우선 지상파 방송은 대표적인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이다. 그런데 ‘지상파’로 방송을 보려해도 안 나오다 보니 으레 텔레비전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 케이블방송을 신청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수신료도 내고 케이블 방송요금까지 내가며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전파를 사용한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옥상에 설치돼 있는 안테나와 방 안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연결만 하면 (지상파) 방송이 나오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된다고 한다. 안테나만 다는 것으로 (지상파) 방송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자연적 및 인위적 난시청, 수신 설비 미비 및 훼손 등),⁷ 우리가 ‘지상파’로 방송을 보는 것(을 요구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들은 결코 아니다.

디지털 전환

방송과 통신은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디지털 복제 기술은 정보 생산에 있어서의 한계비용이 아예 없거나 0에 가까운 조건을 만들어왔다. 이는 물론 디지털화된 방송과 통신의 비용에도 적용된다. 공중파 방송이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였고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휴대전화 요금 역시 어떠한 이동통신 제도와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심지어 0에 가까운 방식이 가능하다. 이는 저 아래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디지털 전환 이후 잔여 주파수 개방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자.

7 이재명. "방송주파수 재배치." [뻔뻔한 미디어농장] 8회 포럼. "전파의 진보적 활용1: 방송주파수 재배치." 2010년 2월 18일 참조.

국내 방송주파수 분배현황

구분	용도	분배현황	비고	디지털 전환
526.5~1606.5kHz	AM	9kHz 단위 120개 채널		
5.980~13.17MHz	단파	5 kHz 단위 617개 채널		
54~72MHz (18MHz)	TV (Low-VHF)	6MHz 단위 3개 채널	채널 2,3,4	
76~88MHz (12MHz)	TV (Low-VHF)	6MHz 단위 2개 채널	채널 5,6	
88~108MHz (20MHz)	FM	200kHz 단위 100개 채널		디지털라디오
174~216MHz (42MHz)	TV (High-VHF)	6MHz 단위 7개 채널	채널 7~13	지상파DMB
470~752MHz (282MHz)	TV (UHF)	6MHz 단위 47개 채널	채널 14~60	DTV
752~806MHz (54MHz)	DTV 임시대역	6MHz 단위 9개 채널	채널 61~69	DTV(임시대역)

<국내 방송주파수 분배 현황, 방송기술인연합회>

디지털 전환과 잔여 주파수 개방

미국의 경우 2008년 11월 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TV용 주파수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남는/비는 대역⁸을 공적 이용을 위해 개방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의결(FCC 의원들 간의 투표)에서 비허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⁹ 이것은 TV방송의 주파수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면서 쓰이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기술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때도 사용 가능했던 것이지만, 디지털로 전환되면 더더욱 비워둘 필요 없는)인 이 잔여 주파수를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이다. 이를 반대하는 TV 방송사 연합과 통신 기업들이 로비를 해왔지만, 잔여 주파수를 활용해 광대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이의 개방을 요구해왔다.¹⁰ 이 TV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인터넷

8 이를 '흰공간' (white spaces)이라고 부르는데, 국내 번역어로 "잔여 주파수"가 통용되고 있다.

9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의 정책 변화는 확인 필요.

10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으로 구성된 '흰공간연합'. 구글의 경우, 700MHz 주파수 경매에서 떨어지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초당 수 기가바이트(GiB)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빠른 인터넷 접속의 문제가 아니라, HD급 멀티미디어의 업/다운로드와 무선IPTV나 DMB와 다른 없는 서비스들이 가능하다. 또한 미디어 정의를 위한 단체들이 이 잔여 주파수 개방을 위한 운동을 벌여왔다.¹¹ 이 단체들이 주목한 것은 이 TV 잔여 주파수를 비허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광대역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여 도시도 그렇지만 농촌 지역에 좋은 질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엄청난 하부구조 구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온 듯 한데 본격적인 논의는 부재하다.

3.2.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위한 전파 자원

전파 자원을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위해 활용해온 대표적인 사례는 공동체라디오 운동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동체라디오운동은 독점 상업 미디어로부터의 소외에서 발단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 주류 미디어로부터의 소외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한 사회의 불평등과 억압의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사회적 권력 작용이 주류 미디어를 주류 미디어에게 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소외와 억압이 어떠한가에 따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유형은 지방 라디오, 조합 라디오, 참여민주주의 라디오, 자유 라디오, 대안 라디오, 대중적 라디오, 교육 라디오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 라디오(그리고 여러 다양한 공동체 미디어) 운동이 각 지역에 따라 특수하게 제기되고 시작된 배경에 따라, 그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확보를 위한 운동과 투쟁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 “여성, 원주민, 인종적이고 언어적인 소수자들, 청년학생, 정치적 좌파, 농민들, 민족해방운동 등에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개입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라디오의 잠재력”¹²은 늘 재발견되어온 것이다.



<한국의 공동체라디오 마포FM>

요구해온 것으로, ‘와이파이2.0’ 또는 ‘와이파이 온 스테로이드(steroids)’ 계획의 일환이었다.

11 <http://main.nc.us/whitespaces>, <http://www.peoplesproductionhouse.org/node/1105>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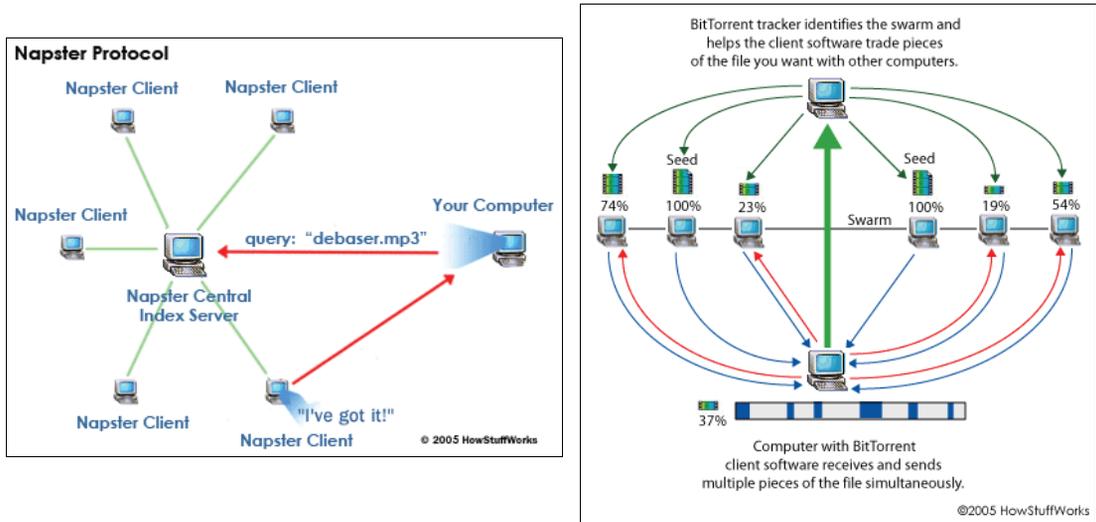
12 Bruce Girard ed. 2001. *A Passion for Radio. Communica*, <http://www.communica.org/passion>

국내에서도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오랜 요구와 운동을 통해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공적 기금의 지원과 전파 확보의 문제를 포함한 정책 결정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우리 보다 앞서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을 진행한 영국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체라디오 펀드(Community Radio Fund)를 조성하여 인력 및 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 등에 공적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http://www.commedia.org.uk> 참조).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Prometheus Radio Project, <http://prometheusradio.org>)는 초기에는 불법의 ‘소형 라디오’ (microradio)를 하다가 2000년에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의회를 설득하여 저출력FM(LPFM)이라는 새로운 라디오 허가 모델을 창출하였다. 2009년 10월 10일 아르헨티나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방송 전파를 기업에 3분의 1, 정부나 공공의 목적으로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비정부단체에 할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다툼에 그 배경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 공동체미디어집단, 5월광장어머니회와 같은 인권단체를 포함한 300여 개로 구성된 민주방송연합이 2년 넘게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역할 하는 등 풀뿌리 미디어 단체와 공동체들의 수년간의 투쟁과 개입의 성과이기도 했다. 전파의 1/3이 비정부단체에 할당된다지만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공적 기금 지원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정부단체 범주에는 사실상 사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단체들과 기득권을 누리는 종교단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정작 전파가 필요한 풀뿌리 공동체는 돈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법이 허용하는 전파 접근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전파의 20%를 민중 영역에 할당하는 것을 아예 헌법으로 보장하였다. 물론(!) 그 이후 어떠한 정권도 그 헌법 조항을 존중하며 그에 합당한 법률을 마련하거나 어떠한 지원 정책도 펴지 않아왔지만 말이다.

3.3. 전파 자원의 자율적 공유와 활용

인터넷은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가 모두 가능한 ‘네트워크 미디어’로 발전해왔다. 인터넷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끝에서끝’ (end to end, e2e)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디자인 철학이 큰 몫을 했다. e2e는 한마디로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기능하고, 네트워크 이용자들(end)이 그에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더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만들고 나누면서 네트워크가 최적화될 수 있다는 접근이다. 네트워크의 소유자에게 제안하여 그들이 실행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최대한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자는 철학인 것이다. 인터넷이 1960년대 말에 등장하고 1990년대에 대중화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을 재구조화할 정도로 빠른 혁신과 발전을 이루게 된 것도 이 덕분이다. 예를 들어 또래간 커뮤니케이션(p2p)은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파일공유가 이뤄지는 이유도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정보의 전송과 공유 방식이기 때문이다.¹³



<냅스터와 비트토렌트의 p2p 전송 방식, Copyright HowStuffWorks 2005>

인터넷만이 아니다. 방송 미디어인 라디오나 텔레비전 역시 기술 결정의 요소로만 보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미디어가 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1920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대략 20여 년 동안 아마추어무선사들은 지금의 인터넷과 다름없는 쌍방향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들고 있었다.¹⁴ 라디오방송이 제도화되면서 지금까지 쓰던 좋은 주파수 대역을 쓰지 못하고 당시 '황무지'로 불리는 단파나 초단파 대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떠밀려난 아마추어무선사들은 '시민라디오'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국가와 기업의 전파 독점에 저항하는 한편, 그 '황무지'를 개간해 훌륭하게 활용하면서 전문 전파 기업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의 혁신을 이뤄내기도 했다. 돈벌이만을 위한 기술 독점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공동체를 위한 자율적인 기술 활용

13 p2p는 "폭넓고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콘텐츠를 이동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술"로서 "저절로 발전하도록 놔 두었다면 p2p 기술은 네트워크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로렌스 레식, 2005. [자유문화], 이주명 옮김, 필맥, 135쪽).

14 백미숙, 2004. "미국 근대 방송제도의 역사적 성립과 '시민라디오'의 실험, 1919-22." 언론과 사회, 12권 2호 참조.

과 탐구가 낳은 혁신이었다. 그러나 그 사회경제적 역사의 과정에서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은 일대다의 중앙집중적 정보 시스템인 방송 미디어로 제도화되어 오늘날에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 통제적이거나 배타적인 독점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위와 같은 방식의 전파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일정한 전파 자원의 개방과 공유는 그에 대한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면서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무선 인터넷을 위한 와이파이(WiFi) 기술에서 잘 드러난다.

참조: 와이파이(WiFi)

IEEE 802.11 혹은 와이파이(WiFi)는 900MHz, 2.4GHz, 5.7GHz 등 비허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것으로 이는 현재 제한된 지역에서지만 음성이나 비디오 신호 등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정보의 전송에 활용되고 있다. 기술 표준만 지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주파수 대역인 것이다. 보통 무선인터넷(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2009년 10월 25일 미국 인터넷 기업인 지와이어(Jiwire)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는 장소는 국내에 1만 2814곳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전체 무선랜 이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7%가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다.¹⁵ ‘끝에서끝’ (e2e)의 기술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지난 10년 동안 사용돼온 와이파이는 보편적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면서 독점된 다른 주파수 대역 이상의 사회·경제·문화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와 같이 와이파이는 소규모 지역에 국한되고 ‘황금주파수’와 같은 장점을 갖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기 조직적이고, 비위계적이고, 탈중심적이고, 전파에 대한 평등한 접근 수단을 모델링하면서 실제로 대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Moglen 앞의 글). 단적으로, 국내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공동체무선네트워크 운동 역시 이러한 와이파이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네트워크

15 미디어오늘. " '무선랜 보안법' 이용자 부담만 늘다 - 변재일 민주당 의원 '연간 1700억 원 증가할 것'." 2009년 10월 28일.

크 구축 활동을 전개해 왔다.¹⁶ 와이파이는 또한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의 비허가 공동체 라디오나 (이탈리아에서처럼) 길거리 텔레비전(telestreet)이 합법적 형태의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암시해주고 있다.

참조: p2p 방식의 휴대전화

p2p는 인터넷의 애초 설계 원리대로 서버-클라이언트의 주종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들이 직접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의 컴퓨터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로서 동시에 기능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다. 휴대전화에서도 이와 같이 특정한 서버와 같은 기지국이나 중앙교환체계 없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 가능하다. 스웨덴의 한 기업인 테라넷(TerraNet, <http://www.terranet.se>)이 개발 중인 p2p 방식의 휴대전화 시스템이 있다.¹⁷ 1Km 범위 안에서 기지국 없이 서로 간에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고, 메쉬 네트워크라면 20Km까지 기지국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접한 전화기들이 집단적으로 p2p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 안의 모든 전화기가 노드로 역할하면서 클러스터 안의 다른 전화기로 신호를 전달한다. 또한 인터넷에 연결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세계로 향할 수도 있다. 더 많은 이동전화기가 함께 할 수록 이 네트워크의 신호 영역(coverage)은 더 넓어진다. 이런 방식이라면 기존 방식과 비교해 단말기 비용과 개발 비용이 훨씬 싸고 전력 소모가 낮고 작동과 유지가 쉽다는 장점이 생긴다. 이 p2p 이동전화 기술은 특별히 고안된 전화기에서 되지만 이론적으로 주류 이동전화기에 통합될 수 있다. 혹은 테라넷의 설립자인 칼리우스(Anders Carlus)의 희망대로 블루투스처럼 모든 휴대기기에 들어가는 기능이 될 수도 있다. 2007년경 테라넷은 휴대전화기 제조업체인 에릭슨으로부터 3백만 파운드를 투자받아 에콰도르와 탄자니아 그리고 영국의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 파일럿을 진행한 바 있다. p2p 방식의 휴대전화와 같은 기술을 위한 유용한 주파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16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하나로 wsfi(World Summit on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메일링 리스트 <http://lists.okfn.org/mailman/listinfo/wsfi-discuss> 참조. 다양한 사례는 하워드 라인골드, 2003. [참여 군중: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새로운 군중](이운경 옮김, 황금가지) 중 "6장 무선 누비이볼" 참조.

17 Amy-Mae Elliott, "TerraNet develops peer to peer mobile calls," pocket-lint.com, 12 September 2007; Katrin Verclas, "Peer-to-Peer Mobile -- Subversive and Effective?" MobileActive.org, 12 September 2007; BBC NEWS, "Mobile system promises free calls," 11 September 2007 등 참조.

4. 전파운동의 가능성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위한 전파 활용을 위한 정책은 서두에서 언급한 현재의 조건 하에서 아래로부터의 힘의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전파는 공공재이고 공공자원이라는 대원칙만 확인해온 것이 한계라면 한계였다. 변화하는 기술·문화 환경에서 이 공공 자원을 공공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필요성의 확인과 노력이 필요하다.

비허가 주파수 대역을 확장하자는 열린 전파(open spectrum)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전개되어 왔다. 아르헨티나와 태국에서 우려되거나 나타난 것과 같이, 주파수 개방만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공적 전파 정책의 강화와 전파의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방송과 통신이 충분히 가능하다.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생생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가능하다.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인터넷망이 깔려있지 않은 방방곡곡에 광대역 인터넷이 가능해진다. 또, 초과이익만 1조 8천억 원이 넘는 이통사에 계속 고가의 통신비를 내가며 쓰는 휴대전화를 대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지금까지 방송사나 이통사의 전파 독점에 의한 방송미디어나 독과점 통신 구조 자체를 바꿔내는 수없이 다양한 방송·통신의 모델이 가능하다. 덧붙여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전파 활용 역시 분명 지금과는 다른 방식일 것이다.

해외의 진보적 전파 활용 사례



강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picotera

1. 들어가며

전파가 공공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파는 물처럼 어디에나 있으며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고, 정보를 얻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매개로서 전파가 꼭 필요합니다. 전파를 통해 communication의 지평이 확장된 현대사회에서 전파의 활용과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의 800MHz대역의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한 이통사의 다툼부터 작년 iPhone도입 초기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 사용을 하게 할 것이냐 3G망과 특정 사의 무선인터넷 망으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의 이야기까지 전파와 관련된 논의들이 점차 다양하게 그리고 사회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혹은 관심이 발생하는 것은 전파란 곧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 - 소통을 매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전파를 생각 해 볼 때 저처럼 전파에 문외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남산타워일 것입니다. “내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켜면 저 남산에서 쏘는 전파가 화면과 음성으로 보이는 것” 전파는 저 위에서 쏘아지는 것, 전파는 내가 받기만 하는 것. 이 그림은 한국의 전파와 관련된 여러 활용,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저 높은—국가 위주의 전파 정책, 내가 만드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듣고 보고 싶은 것과 무관한 전파라는 인식은 엄밀하지는 못해도 틀렸다고 하기는 힘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파와 관련된 또 하나의 모습은 편리함일 것입니다. 무선통신시대가 90년대에 꽃을 피웠고 그 이후 우리 삶의 양식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그 이전과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선전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 가정, 기업체, 공공장소에도 무선 인터넷 공유가 널리 확산되어 우리는 언제나 전파를 이용해 인터넷에 편리하게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누군가와 공간적 제약 없이 communication을 나누고 싶어 하며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여러 기술과 자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자본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들을 제공합니다. 통신요금이 더 싸진다면 우리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 많은 만족감을 표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 해 봅시다.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파는 오직 국가와 자본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신되고 소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전파를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활용이 열려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국가와 자본의 독점에 전파가 억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정 대역대의 전파 잘게 쪼개기, 동일 전파에 신호를 나눠서 보내기 등등 효율적인 전파 활용기술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과 상상들을 이용해 전파를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남산에서 쏘아지는 방송파와 3G망이 아닌 우리 동네에서, 문학과 정치와 음악과 경제에 관심 있는 이들과 전파를 주고받는 것은 한국에서는 단지 꿈일까요? 전파가 공공재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수에 의해서만 전파자원이 독점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은 전파를 공공재라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에서의 진보적 전파 활용례를 검토함으로써 위 질문에 대한 작은 단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파의 여러 활용례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공동체 라디오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진행 할까 합니다.

2.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

호주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규모와 위상은 우리 입장에서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4년 당시 정식으로 허가받은 공동체 라디오는 85개소에서 2007년에는 400개소에 이르도록 성장했고, 중계방송이 아닌 직접 방송을 하는 라디오 방송국은 2008년 27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¹⁸ 지역(rural) 공동체 라디오의 51%는 그 지역 소식의 유일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7-08년 호주 전체 라디오 방송 시간 중에 지역사회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77%이르고 있습니다.



<호주의 공동체 방송 관련 소식 및 통계를 알려주는 CBOonline, <http://www.cbonline.org.au> >

2007-08년 호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을 하는 자원자(volunteers)는 19,858명입니다. 직접방송을 하는 각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당 72명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방송/제작(On air/production)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26세 이하의 젊은 지원자도 4,013명으로 전체 자원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업적인 공동체 라디오 운영자는 462명,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운영자도 476명에 달합니다. 각 공동체 라디오가 다루는 주요 주제에 따라 운영자의 숫자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 5.6명의 운영자가 공동체 라디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donors)도

18 Community Broadcasting Database : Survey of the community radio sector 2007-08 financial period public release report, Prepared by CBOonline, Community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ustralia, Sydney, November, 2009, Produced with the assistance of the Community Broadcasting Foundation <http://www.cbonline.org.au/%5Cmedia%5CCBD09.pdf>

47,869명(전체수입비중 12%), 광고수입(sponsorship)도 전체 수입의 4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나 지역정부의 재정 지원은 2%정도로 방송국 별로 편차는 있겠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호주 공동체 라디오의 수입은 2007-08년 기간 동안 69,807,725\$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26억 원 정도입니다.

이정도 되면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는 ‘공동체’ 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소박하게 인식하는 수준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가 이처럼 풍성한 이유로는 땅덩이가 엄청나게 크기에 상업방송이 모든 공간과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메울 수 없다는 점, 국가가 직접적으로 방송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보다 지역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의 비용이 적다는 점 등등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기반의 정보를 해당 지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는 15세 이상 호주인중 45%가 듣는 신뢰받고 필수적인 매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호주에서 디지털 라디오 전환 정책(the digital radio implementation policy framework)이 발표되었습니다.¹⁹ 당시 호주의 TV는 3개의 상업 네트워크와 8개의 지역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디오는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공동체 라디오, 270개의 상업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정책은 다양한 사업자 혹은 개인과 공동체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 면허 획득과 운영지원, 디지털 위성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성라디오의 경우 다양한 재해 상황 시에도 방송 인프라가 파괴되지 않기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활성화 되어있는 공동체 라디오를 디지털 라디오로 적극 끌어안으려 하고 있습니다. 호주 디지털 라디오는 Eureka-147²⁰ 플랫폼을 적용할 예정이며, 호주만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플랫폼을 개선 한 후 최종적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의 디지털

19 Digital Radio Introduction Framework for Australia, The Telecommunications Journal of Australia, Autumn 2006 by Neil, Gordon

호주는 우리와 달리 디지털 방송의 도입이 아날로그 방송의 대체가 아닌 보조적 역할(supplement)의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처럼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이 동일한 내용을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방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적으로 호주도 디지털 방송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20 1987년 유럽에서 시작된 디지털 라디오 방송에 대한 표준 연구 프로젝트로 1995년 2월 유럽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1995년 9월 BBC가 지상파 Eureka-147을 통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한국에서는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방송 추진위원회가 2001년 4월 잠정적인 국가 표준으로 제안하였고 2002년 2월 지상파 DMB의 표준방식으로 확정되었다.

라디오 전환 정책은 네 번째 범주로서 open narrowcasting²¹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의 세 범주는 일반적인 라디오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며 open narrowcasting은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소비층을 위한 Narrowcasting>

open narrowcasting은 상업 방송이나 공동체 방송과 달리 호주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의 방송사업자 자격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²². 대신 open narrowcasting은 class licence하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open narrowcasting을 하기 위해서는 전송 허가(transmitter licence)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open narrowcasting관련해서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LPON(Low Power²³ Open Narrowcasting)입니다. 2004년 호주에서 open narrowcasting관련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HPON(High Power Open Narrowcasting) 160개소 이상, LPON은 550개소 이상 됩니다.

디지털 라디오 전환 정책에 의해 LPON은 FM 87.6MHz, 87.8MHz, 88.0MHz에 고정되어 1W~10W사이의 출력으로 방송됩니다²⁴. 물론 이전에 허가받은 LPON은 88.1MHz에서 108.0MHz사이에서 6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LPON들도 다시 FM 87.6MHz, 87.8MHz, 88.0MHz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PON의 허가는 기본적으로 경매제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방송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매가 단독 입찰로 진행 될 경우 ACMA(호주방송통신인허가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서는 최저경매가격(reserve price)으로 LPON 허가를 획득할 권한을 입찰자에게 제공합니다.

호주에서의 공동체 라디오 신설은 일정자격이 되는 누구나 쉬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

21 narrowcasting은 broadcasting의 반대 개념으로서 한정된 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서비스를 말함. 각 채널의 내용이 세분화 된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가 대표적. 집송(集送), 협송(狹送)으로 번역된다.

22 <http://www.anra.org.au/index.html>

23 소출력. 기존 FM 방송이 500W~10kW의 출력을 이용한 방송인 반면, 공동체 라디오는 10W이내의 소출력을 이용한다. 소출력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이냐는 국가별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50W~100W까지를 소출력으로 보고 있다.

24 거주지역(residential)은 1W, 비 거주지역은 10W의 출력으로 2km~10km정도의 청취권을 가지게 된다. 거주지역의 정의는 20km이내에 인접한 도심지나 지역(locality)가 있는 경우이고 비 거주지역은 20km이내에 도심지나 지역의 경계가 인접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장벽이 낮은 시장입니다. 호주 정부는 공동체 라디오 운영자들을 위해 다양한 매뉴얼과 각 출력별 간섭을 막기 위한 전파 간격 조정, 허가권 발급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공동체 라디오의 재정 중 정부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기한 대로 2%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참여에 의한 재정지원(donor)의 1/6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는 각 지역의 색채를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호주 국민의 절반 정도가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하며 수만 명의 호주인들이 공동체 라디오의 일에 참가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호주는 말 그대로 대륙이고 중앙 정부와 소수의 독점적인 언론 기업이 호주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는 공동체 라디오가 수많은 호주인들의 성원과 동의 속에서 사회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정착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주류 언론과 중앙의 메시지에 없는 자신들의 수다를 담고 나누고 싶어 하는 이들이 방송국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주파수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에 맞서는 투쟁이 있었기에 ‘이 주파수는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이 지역의 청취자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²⁵

호주에서 저출력 공동체 라디오를 LPON이라 부른다면 미국에서는 LPFM(Low-Power FM)이라 부릅니다. FCC(미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1948년 초에 저출력 라디오 방송의 면허를 지역 공동체 그룹, 대학, 교회에 허가하였다가 1978년에 100와트 미만의 모든 지역 라디오 방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4월이 되어서야 다시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²⁶ 2000년 재허가 당시 저출력 라디오의 신청자 수는 전미 통틀어 720개소에 이르렀습니다(2009년 말 기준 미국의 저출력 라디오는 사업자 485개). 미국의 저출력 라디오는 철저히 비상업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방송사업자는 저출력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25 <http://prometheusradio.org/>

26 http://www.kbi.re.kr/report/trendview.jsp?book_no=112&book_seq=1601&menucode=3/1/1

이 글에서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주요 문서인 “Can We Build a Wireless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at Values Everyone's Right to Communicate?”²⁷ 를 간단히 번역·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는 주파수 대역 중 허가되지 않은, ‘불법’이라 규정되는 부분들을 공용 인터넷 접속(free internet access), 인터넷 라디오, 공동체 활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는 LPFM 방송국과 청취자들을 거대한 공동체로 묶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 라디오를 더 확대해 나아가고, FCC의 규제 정책에 효과적인 공적 대응을 하며, 미디어 민주주의와 LPFM 라디오를 지원하고 이 매체의 중요성을 의식하게끔 후원하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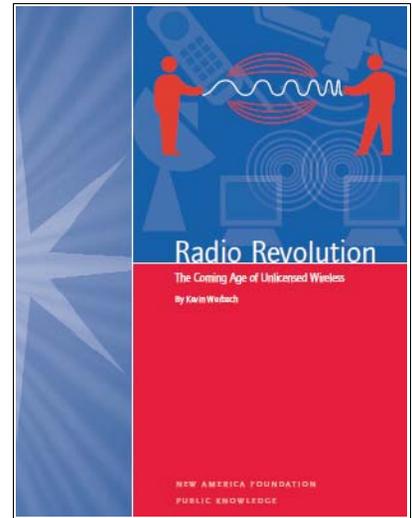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 <http://prometheusradio.org>>

FCC는 미국의 공동체 라디오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 해적방송을 하기 위한 최대 출력은 23mW입니다. 만약 이 출력을 상회할 경우 FCC에서는 방송장비를 모두 몰수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일부 회원들도 고의적으로 해적방송을 해서 FCC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로서 프로젝트는 해적방송을 하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FCC나 거대 미디어 자본의 간섭 없이 전파를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면 모든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 미디어(community media)가 확장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술적, 경제적 요인들이 등장했고 더욱 많은 이들을 통해 확장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의 논의를 통해 주파수 대역중 허가되지 않은, ‘불법’인 영역이 더 개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많은 소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7 http://prometheusradio.org/spectrum_reform/articles/can_we_build.html
Vikki Cravens, Dharma Dailey, and Antwan Wallace, 2006. 01. 10.

1. “모든 이에게 방송의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보라.” 기술적 사례.

WiFi의 경우 인터넷을 위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스마트 라디오²⁸ 기술을 이용해서 소통에 기반을 둔 저출력 공동체 라디오를 꾸리는데도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전문가 Kevin Werbach는 『라디오 혁명 : 무허가 무선 시대의 도래²⁹』에서 “이 종이에 적혀있는 개요 몇 개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방송인이 되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를 통해 수만 수천의 소통 채널을 가진다는 것은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단지 상상만 하던 것이었습니다. J. H. Sinder의 전파 가이드에 따르면 동일한 대역폭에서 1960년에는 10개의 TV채널이 방송될 수 있었다면 현재에는 그 대역폭에서 100,000대의 휴대전화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inder는 “허나 이것이 발전의 끝은 아니다”면서 “다음 1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마도 비교해 보라. 100,000개의 요인들로 인해 스펙트럼의 수용력이 또다시 증가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선 통신의 발전이 동등하게 적용 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많은 소통을 지난 10년간 가능하게 했지만, FCC는 그저 이러한 발전이 이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술들이 직접적인 퍼블릭 액세스에도 적용이 될까요? 공공 미디어가 100,000배 또는 100,000의 100,000배로 확장된다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Radio Revolution by Kevin Werb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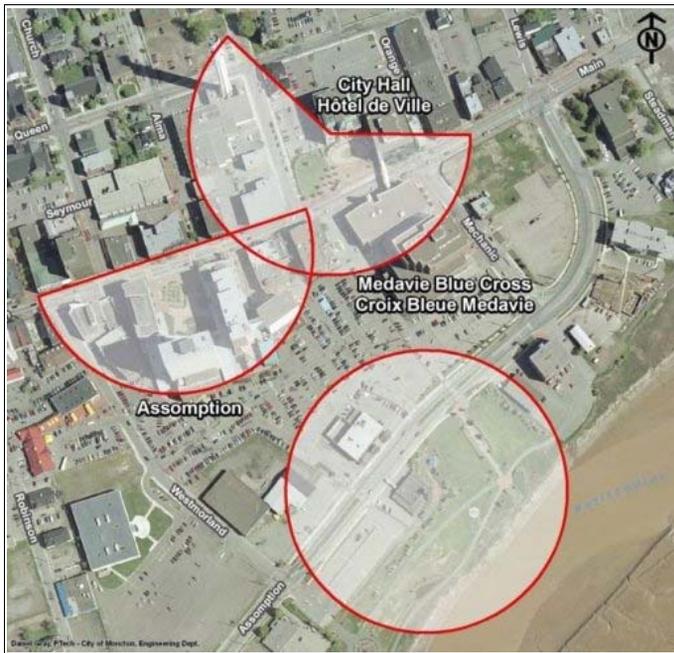
WiFi는 수많은 라디오 기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휴대전화, 집 대문, 리모콘 등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라디오들은 “무허가로” 전파를 전송하고 받습니다. 무허가라는 말은—몇몇 대형 통신사가 이야기 하듯이—아무 규칙 없는 난장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허가된 라디오는 FCC로부터 승인을 받지만, 무허가

28 다양한 통신 기능을 가진 무선 송수신기로 ‘스마트 라디오’라는 단어 보다 우리에게 ‘스마트 폰’에 가까운 개념이다. Apple iPhone처럼 WiFi, 3G등 다양한 망을 통해 이동전화, PDA, 멀티미디어, 컴퓨터의 일부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9 In Radio Revolution : The Coming Age of Unlicensed Wireless, New America Foundation and Public Knowledge, December 2003

PDF : <http://werbach.com/docs/RadioRevolution.pdf>

라디오는 그것의 제작자가 무허가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제작자는 FCC의 승인을 위해 엄격한 사양에 맞춰 기기를 디자인하죠. 한번 승인을 받으면 자유로이 그 기기를 생산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마다 매번 FCC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에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처럼 발전된 시스템은 더 많이 확산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의 경우 “지자체 자전거 도로” 를 만들었습니다. 이웃이나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이 자전거 도로에 클리블랜드는 무료 무선 인터넷 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이웃과 지역 사회에 무료로 퍼블릭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보건, 정부 기관의 30~60%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대학과 여타 공공장소에서의 액세스 지점들을 늘려감으로서 클리블랜드의 디지털 도시 계획자는 이것이 디지털 인프라가 되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 동부의 대학들도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네트워킹 하고 있고 일리노이에서도 무선 공동체들이 10\$의 상한선을 두고 무선 인터넷을 차등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Moncton 지역의 Free WiFi Zone>

<http://www.jarche.com/2007/06/moncton-finally-gets-wifi/>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허가가 통신 인프라 구조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적 전파 운영 원칙 초안³⁰』에서 Harold Feld는 “전파 허가는 ... 시민들이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 허가가 독점적이라면, 시민들은 그저 정부의 허가를 거치는 중개인으로서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중개인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배치하는지 또는 어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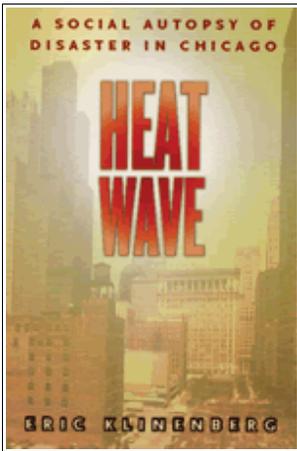
30 Draft Principles of Progressive Spectrum

컨텐츠가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동체와 개인들은 정부의 허가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체계가 지원하는 기술적인 수용량이 무엇이건 간에, 또는 어떠한 컨텐츠를 사람들이 선호하던, 혹은 공동체들이 다른 쪽으로 배치된 서비스를 보고 싶어하는 비율이 있건 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허가에 달려있다” 고 이야기 하며 이어, “자유로운 도시인은 결코 농노처럼 정부에 의해 주어진 독점적인 주파수 독점 사업권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전파 통제와 분권화는 경제 영역에서 진행되어왔지만, 그것은 그것의 근본적인 정당화를 수정헌법 제1조로부터 끌어낸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기기들은 항상 저출력이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부분의 WiFi 같은 스마트 라디오들은 거대한 방송사업자처럼 “외치기” 를 하는 대신 “속삭임” 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삭임은 커다란 장점—속삭임 경우 작은 방 안에서도 여러 명이 대화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력 송신기는 저렴합니다. 네트워크는 저렴한 송신기와 수신기를 통해 조금씩 증가합니다. 네트워크는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치 돈이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 사용되듯이 각각의 송신기는 지불위로 그것을 던지는 이에 의해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수록, 우리가 지닌 사람들의 영역이 더 늘어나고 더 좋은 네트워크가 운영될 것입니다.

거대 미디어와 거대 통신사는 FCC가 전파의 사용에 대해 조금씩 허가를 내주는 “지휘와 통제” 의 방법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합니다만, 지휘와 통제는 미디어 민주주의에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연결된 하나의 줄기는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무선망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는 현재 통신 정책의 몇몇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몇 가지 실수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메사추세츠 주의 스프링필드 외곽 지역에서는 공공 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주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열립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접속” 을 통해 직업을 찾거나 학교 숙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위에서 바라보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지역은 어쨌거나 “접속” 이 되는 곳일 것입니다.



<Communication의 부재가 시카고에 불러일으킨 재앙을 연구한 Heat Wave>

1995년 여름 시카고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록적인 무더위로 사망했습니다(시카고 대화재 사망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전례 없는 보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디어는 그것을 심각한 위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Eric Klinenberg가 사망자와 관련, 5년간 연구한 그의 책 『Heat Wave』에 의하면 사망자들은 최 극빈층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늙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건 노동자들은 심각한 환경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규모의 공공기관에는 그것이 보고되지 않았기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는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시카고의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대응하지 않아 손실과 고통을 배가시켰습니다. 사고로 불행을 겪은 이들의 묘비에는 아마도 “부자에서 서민으로 흘러

가는 미디어 민주주의는 부자에서 서민으로 흐르는 경제보다 나올 것이 없다”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국 어디서나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이모칼레에서는 공중 보건 자문단이 언론에게 물이 세균에 오염되었으니 마시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보건 자문단의 이야기가 도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주노동자를 위한 미디어가 없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지방 공무원과 지역 미디어가 그들의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소통의 간극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국가 정책 입안자가 이러한 간극을 메우리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옛 방식의 소통 인프라 구조가 운용되고 있는 곳에서 이런 문제들은 집요하게 남아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를 활용함으로써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있습니다. 이모칼레의 이주노동자들이 LPFM 방송국을 가지고 보건 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한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지루한 허가 과정은 그런 방송국은 특별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미군이 전투를 위해 개발한 것과 같은 즉석의 저렴한 네트워킹이 문화와 도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상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네트워킹이 1995년의 시카고에 있었다면,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겠죠. 오늘날 메사추세츠 주의 스프링필드 외곽 지역에서는 Syracuse대학의 Murali Venkatesh교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은 1주일에 하루 접속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킹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자들은 최 극빈층과,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로서 디자인 팀은 비영어권 사람들과 문맹인 사람들에게 유용한 네트워킹을 제공하

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사람들이 쉽게 소통하고 지역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을 생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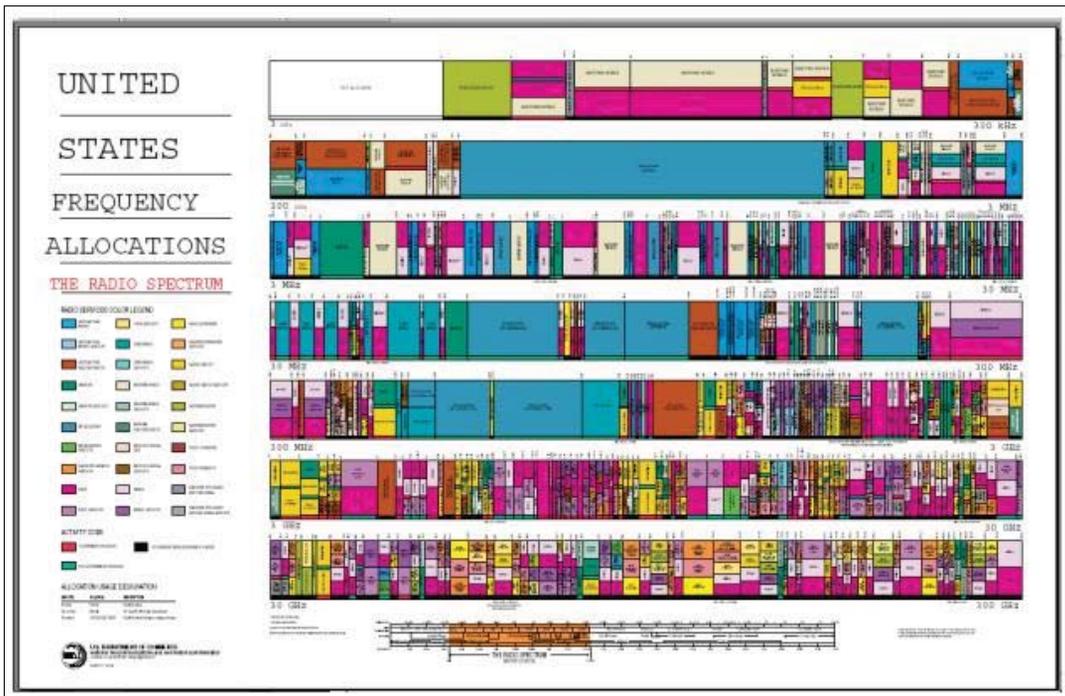
소통은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백년간의 정신분석학, 사회학, 의학적 연구결과들은 삶이 질이 곧 개인의 사회적 얽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얽힘이 있을수록, 그 얽힘이 더 강해질수록 개인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도 다른 이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통신 정책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화시스템을 예로 들어 보죠. 대부분의 미국인은 전화사에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은 이용자들의 전화사용 비율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이용률은 종종 통화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수입이 낮은 이용자의 집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911로 전화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만, 나날이 통신은 삶의 질에 대한 충분치 못한 가격을 과소평가하는 정책들에 의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통신 정책은 수입이 낮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종종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를 사소하다고 느끼는 이들에 대해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통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고무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가난한 이들에게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낙후된 전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책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만약 당신의 집이 있다면 911을 부르시오. 그러나 지붕이 새고 당신의 재정이 붕괴되었다면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없소.”

스마트 라디오와 촘촘한 연결의 시대는 이러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무선 통신의 인프라 구조는 다수의 네트워크들 또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협의하여 나누는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화회사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독점의 지원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통신 인프라 기술은 국가에서 지방자치체에서 영세 사업자나 비영리 기관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디자인은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딱 맞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적절한”, “때맞은” 또는 “필요한” 통신은 보통 사람들 위에서 있는 이들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예상하여 네트워크를 디자인한 정책 입안자들의 선의에 의해 추가된 많은 문제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꼭 맞게 네트워크를 수정할 수 있는 이용자와 함께 밑바닥에서부터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Cost dose equal access. 경제적 사례

2003년 9월 17일 워싱턴 포스트의 Rama Lakshmi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선 전화,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인도인 로비 그룹이 마을 사람들에게 저출력의, 우리-스스로 만드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0.5W의 송신기와 마이크, 안테나, 카세트 플레이어, 이것은 총 25\$였다. 그룹은 이러한 방송국은 약 삼마일, 작은 마을 규모의 가정취권역을 확보한다고 이야기 했다” 옛 방식의 저출력 아날로그 라디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통신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쉬운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무선에 기반을 두어 통신채널을 확대해주는 통신 도구는 더 많은 사람들의 통신 더 많은 통신 접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가 “엄청난 규모”의 더 많은 통신을 동일한 옛 주파수대에서 가능하게 해 주는 것처럼, 어떤 파이를 사람들이 얻어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기대 역시 마찬가지로 날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전체 주파수 분포도. “백백합니다.” <http://www.ntia.doc.gov/osmhome/allochrt.PDF>>

WiFi 기술을 통해 스마트 라디오는 미국의 공동체에게 저렴하고 받아들일만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피링필드의 공동체 네트워크 시행 비용은 총 60,000\$정도로 예상

되는데 물론, 인도의 LPFM 방송국의 25\$에 비하면 엄청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모든 컴퓨터 기술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라디오의 가격 역시 시간에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칩 생산자인 Intel역시 이미 스마트 라디오의 칩을 만들고 있으며 Cisco, Microsoft, Sony같은 기업 역시 무선 기술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옛 라디오 방식에 비해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스마트 라디오가 우리에게 가져 올 놀라운 기회는 LPFM정도의 낮은 가격과 편리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용자 등급” 기술을 사용하여 통신 인프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우리가 노력한다면-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몇몇 놈(guy)을 위해 스마트 라디오의 가격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용 도로에서 차를 모는 사람은 반드시 Mercury Cougar를 몰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터무니없나요? 불공평한가요? 그러나 이것이 FCC가 AM과 FM방송자들에게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IBOC라는 전매 기술은 부분적으로 ClearChannel 소유인데 AM또는 FM 디지털 방송을 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라도 이 기술을 써야만 합니다. 거대 미디어와 거대 통신사는 절대로 대중들이 기술들의 통제자물쇠 해제하고 전파를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을 가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전파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정 회사의 상품만을 사용하도록 명령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후 Can We Build a Wireless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at Values Everyone's Right to Communicate?의 원문에는 III. Ye Olde Dumb Network, - The First Amendment Cas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 미국의 혁명 당시부터 몇 가지 법률적인 사항과 이를 둘러싼 싸움 그리고 그것이 현재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에 어떠한 배경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서술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이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싶어 제외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호주의 경우 공동체 라디오의 현 상황과 법적 지원을 살펴보았고, 미국의 경우 앞으로의 공동체 라디오는 어때야 하는가와 관련한 선언적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며 호주의 상황이 지역에 뿌리내린 완숙한 공동체 라디오라면 미국의 경우 국가와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새로운 영역들을 확보하고 돌파하는 상황이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루어야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호주이건 미국이건 부러운 것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처럼 주파수 탈환 전략이 세워지고 그에 따르는 여러 운동이 대중적으로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남한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정치적 지형도 역시 공동체 라디오의 발전에 독특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국도 외국처럼 넓은 토지에서 지역적 이해, 중앙정부와 자본의 빈틈을 비집어 사람들의 필요에 발맞추어 공동체 라디오가 생성·분화되고 정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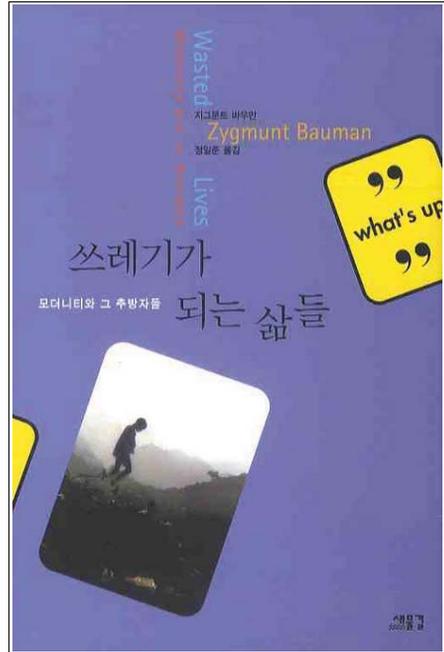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회적 얽힘은 누구나 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마다의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쓰레드로 포스팅으로 이야기를, 관계를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엮임이 분화된 개인 각각의 취향과 구미에 맞는-컴퓨터 앞의 외로운 개인만의 것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러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도 많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ection 10. 기고 글 모음

- 쓰레기가 되는 삶들_장여경 ~ 38
- 1987 광주구장 대 미스터리_강진원 ~ 41
- 낙서 실명제_장여경 ~ 46

section 10.에는 지난 정보운동 Act On 발간 이후 진보넷 활동가들의 외부 기고 글들을 모았습니다.

쓰레기가 되는 삶들³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della at jinbo.net

‘쓰레기가 되는 삶들-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새물결 펴냄)

정보 인권운동의 고민은 이것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 이명박 정부 하의 인권운동에서 정보인권 분야만 힘들겠는가. 그러나 나를 때때로 질리게 하는 것은 이 운동에서 ‘울림’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울림이 없는 운동이란 것이 애초에 가능한가.

31 월간 『사람』에 기고한 글입니다.

정보인권이 정보주체에게 외면 받고 있다. 지역주민이 CCTV를 적극 환영하는데 외부에서 그것을 감시라고 외치는 것이 의미 있는가. 패킷 감청이 사생활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규탄할 때, 정보주체가 맞춤 광고를 위해 선뜻 감청에 ‘동의’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 봐야 하는가. 우리의 주장들은 갈수록 허무한 외침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감시 이론은 많은 부분 푸코에게 신세를 저 왔다. 푸코는 파놉티콘(원형감옥)이 권력의 규율 장치라는 것을 고찰하였고, 주체는 감시의 시선을 통해 훈육된다고 보았다. 죄수는 자신이 감시 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간수의 규율을 내면화한다. 이것이 전통적인 빅브라더론 이다.

그렇지만 실제 현대 감시사회에서 CCTV와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작동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 아무도 감시를 개의치 않는 사회에서 누가 어떻게 훈육된다는 것인가.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 책을 추천하였다.

전자감시장치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는 과거의 경찰국가와 다르다. 디지털 매체는 은밀하기도 하지만 객관성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감시 기법과 다르다. 그러나 가장 다른 점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훈육’ 이 아니라 ‘배제’ 라는 점에 있다.

과거에도 감옥과 정신병원은 격리의 공간이었지만, 격리된 ‘비정상’ 은 ‘정상’ 으로 복귀하기 위한 임시적 상태였다. 산업사회에서는 범죄자나 노숙인 역시 산업 예비군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잉여’ 라는 개념은 ‘정상’ 으로의 회복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사실 잉여는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이다. 우리는 보통 공장에서부터 나오는 생산품의 트럭에 주목해 왔지만, 공장에서는 날마다 두 종류의 트럭이 떠난다. 하나는 창고와 백화점으로, 다른 하나는 쓰레기장으로(p57). 산업 폐기물의 문제도 물론 심각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삶조차도 생산품과 쓰레기로 가른다.

전자감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게 하려는 데 있지 않다. CCTV의 실질적 기능은 ‘생산적인’ 보통의 시민들과 그들의 재산을 그렇지 않은 사람

들로부터 지키는 데 있다. 감시원들이 CCTV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는 ‘쓰레기’ 들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공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이다.

오늘날의 감옥은 수용자를 훈육함으로써 공동체로 재통합할 수 있다는 교정의 이상을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 오로지 사회적 불량품을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창고’ 일 뿐이다(p152).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부터 DNA를 채취하여 평생 국가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이 용납되고, 보통 시민들은 안도하는 심정으로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감옥을 꽉꽉 채우는 형벌 국가가 강화되고 있다. 반면 국가의 보호 기능은 점차 그 대상을 줄이고 있다. 시장의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무능력이 갈수록 범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p101).

옛날의 빅브라더는 사람들을 규율에 ‘포함’ 시키기 위해 통제하였다. 새로운 빅브라더의 관심은 ‘배제’ 이다. 쓰레기들은 쓰레기장에만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 나쁜 소식은 오늘날 오래된 빅브라더와 새로운 빅브라더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다(p241). 옛날 빅브라더는 사회 감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빅브라더는 감옥을 위한 담장을 치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공고화하는 데 철두철미하다. 불안하기만 한 시대에 시민들은 담장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빅브라더를 반긴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진부하지만, 역시 희망은 연대에서 찾아야 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 두 빅브라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인가, 포함/배제의 게임이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유일한 방식인가 물어야 하는 것이다(p244).

물론 쉽지 않다. 절망은 우리 상황이 연대의 틀을 짜기 점점 더 어렵다는 데 있다. 인간적 신뢰가 외부인에 대한 의심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p169). 민족적 자부심이 촛불을 들수록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비례해서 커져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직은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드문드문 잡고 있는 손들의 온기에 의지하며, 이 책이 당신에게도 그런 절망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87 광주구장 대 미스터리³²



강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picotera

2009년 한국 프로야구는 WBC 준우승으로 시작 해서 최다관중 돌파(592만 명), 한국시리즈 7차전 마지막 끝내기 홈런, 기아의 V10달성 등 풍성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다. 올해와는 다르게 프로야구가 '망했어요'를 외치며 침체에 빠진 해는 언제일까? 이는 연도별 평균관중을 보면 어림잡을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00만 명이 안되는 관중 동원을 해서 프로야구의 침체기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흥행에 완전 망해버린 경기는 어떤 경기일까? 다음은 프로야구 역대 최소 관중 순위이다.³³

32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뉴스레터 『돌러차기』 10호에 실린 글입니다.

33 KBO 2009 Record Book

http://www.koreabaseball.com/generation/e_book/pdf_down.asp?down_url=2010record_book_pdf

역대 최소 관중

순위	일 자	관 중(명)	구 장	대 진
1	1999. 10. 7	54	전 주	쌍방울 - 현 대
2	2002. 10. 19	69	사 직	롯데 - 한 화
3	1999. 10. 6	87	전 주	쌍방울 - L G
4	2002. 10. 16	96	사 직	롯데 - 현 대
5	1999. 10. 8	107	전 주	쌍방울 - L G
6	1987. 7. 2	132	광 주	해 태 - 빙그레
7	2000. 10. 12	134	광 주	해 태 - 롯데
8	2000. 10. 5	145	광 주	해 태 - 롯데
9	2002. 10. 15	147	사 직	롯데 - 현 대
10	2000. 10. 1	156	광 주	해 태 - 한 화
11	1999. 9. 27	175	광 주	해 태 - 한 화
12	2000. 10. 11	183	광 주	해 태 - 롯데
13	1987. 7. 3	186	광 주	해 태 - 빙그레
	2002. 6. 19		사 직	롯데 - 현 대
15	1987. 7. 1	195	광 주	해 태 - 청 보

<역대 최소 관중 순위>

위 자료를 보면 야구와 관련된 여러 흔적들을 읽을 수 있다. 사직구장 69명이라는 뭔가 화끈하면서도 민망한 기록을 보면 부산을 구도(球都)라 부르는 것, 롯데야구팬이 세계 최고라고 흥청거리는 것에 가웃해진다. 전주 쌍방울 레이더스의 눈물나는 관중동원 숫자는 모(母) 기업의 문제와 성적부진 등 총체적 부실을 가늠하게 하며, V10의 명가 해태-기아의 2000년 최소관중 기록을 보면 모 기업의 부도와 추락하는 성적이 광주 야구팬의 민심을 얼마나 냉랭하게 만들었는지 짐작케 한다.

그런데, 위의 순위에서 1987년이 이상하다. 다른 최소 관중 순위는 시즌 막바지인 9월 말에서 10월에 작성된 것에 비해 시즌 중반인 7월 광주구장에서 세 경기나 최소 관중 순위에 들어있다. 즉, 해태는 당시 못나가는 팀이 아니었으며, 전년도 한국시리즈 우승자라는 프리미엄까지 있는 팀이기에 위의 최소관중 순위결과는 지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순위에서 1987년 해태 타이거즈와 관련된 자료를 추려보자.

6위. 1987.07.02. 광주구장 132명

13위. 1987.07.03. 광주구장 186명

15위. 1987.07.01. 광주구장 195명

그리고 19위 역시 광주구장이다. 19위. 1987.06.30. 광주구장 213명.

헐... 1987년 6월 30일, 7월 1일, 2일, 3일. 이 4일 동안 해태에는, 광주에는,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1987년 6월 30일

노태우는 오전에 전대갈을 방문 전일 발표한 시국수습방안(6.29선언)관련 담화를 나누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노태우의 6.29선언이 88올림픽 개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마린피츠워터 미 백악관 대변인은 노태우의 직선제 개헌 등 8개 건의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전진적인 제안"이라 평했다. 29일 프로야구 경기에서 OB가 삼성을 상대로 9:1의 승리를 거두어 30승을 찍고 전기리그 2위 확정, 페넌트레이스 직행 티켓을 거미진다. 1위 삼성, 2위 OB가 확정. 해태 26승 2무 23패. 30일 롯데를 상대로 3:0 승. 승리투수 문희승(완봉)

1987년 7월 1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을 전대같이 적극 수용하며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대화를 제창했다. 민주당 헌법개정안작성특위는 7월 1일 아침에 4년 중임 대통령 임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개헌안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노태우의 6.29 선언을 만장일치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 전일보다 7.66포인트가 오른 411.76을 기록했다(오오 민주화 오오...). 프로야구 관련해서 1987년 6월 30일 당시 1위 삼성, 2위 OB, 3위 해태, 4위 롯데였다. 7월 1일 해태 26승 2무 24패. 청보 핀토스 상대로 3:5 패. 승리투수 임호균(완투)

1987년 7월 2일

노태우랑 기명사미가 전격 회동을 가진다. 5·18광주민주화운동(당시 표현 : 광주 사태)의 관계자와 핵심적인 책임자로 규정되었던 김대중씨의 사면복권이 추진된다. 통일민주당창당대회방해폭력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정치깡패 김용남(속칭 용팔이)에 대해 치안본부가 전담요원 40명을 배치,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해태가 재일동포투수 김성길의 삼성팀 이적과 관련 선수등록자격 적법성여부를 두고 KBO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성길 선수는 일본 한큐 소속이었는데 이 한큐와 해태는 자매구단이었는데 김성길이 해태와의 트레이드를 거부,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되었다가 삼성에 간 것. KBO는 선수계약동의서를 양도협정서로 간주해온 것이 관례(그놈의 관례!)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힌다. 7월 2일 해태 26승 2무 25패, 빙그레를 상대로 5:3 패. 승리투수 이상군(완투), 이상군은 7월 2일 당시 다승공동 2위, 11승 모두 완투승(!!!)

1987년 7월 3일

민정당이 광주사태희상재위령탑건립을 제의했으나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 및 유족회 대표, 부상자회는 이를 거부한다. 김영삼, 김대중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6.29선언의 의미와 향후 정국구상을 밝힌다. 6월 수출 총계는 41억불이고 1인당 GNP는 세계 32위인 2,150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6.6%를 기록한다. 유명우는 6차 방어전을 국내에서 치르기로 하였고, 101회 워블던테니스 8강에 미국의 나브라틸로바가 안착했다. 씨름판은 현대중공업의 이만기와 럭키금성 이봉걸의 양강구도에 삼익가구의 큰곰 홍현욱이 가세해 3파전 양상을 보인다. 프로야구 전기리그 종료. 해태 27승 2무 25패 전기리그 4위. 빙그레를 상대로 4:2 승. 승리투수 신동수. 전기리그 삼성 우승 33승 0무 21패, 승률 0.611(ㅎㄷㄷ)

'야구장을 찾지 않을 정도로 광주시민이 들불처럼 일어났다'라는 해석이 과장된 것이라면 '야구구장이 시즌 중반에 텅 빌 정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정도의 해석은 받아들일만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광주에 일어난 그 어떤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1987년 7월 1일, 2일, 3일은 6.29의 여파가 한반도에 격렬히 몰아쳐 6월의 격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국으로 진입하는 초입이라 할 수 있다. 대갈마왕은 6.29를 수용했고, 정권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덮어두고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들에게 구애의 춤을 추고 있었다.

이래저래 뒤져보아도 1987년 7월 광주구장의 최소관중과 상관관계를 발견 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는다. 언론통제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광주지역과 관련한 특별한 뉴스도 찾을 수 없었다. 7·8·9 노동자 대투쟁 또한 그 촉발을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조합 창립으로 본다면 87년 7월 광주구장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단서로 보기는 힘들다. 그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만한 해석이라면 '6.29선언, 김대중의 사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두환 정권의 억지 화해 무드 등이 광주지역에 야구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제공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 하고 나누기 위해서 잠시 야구장을 외면했다'정도가 될 것이다. 정황상 무난히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진실은 아닐 것이다. 광주 시민들이 잘나가는 팀의 시즌중반 경기를 제치고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은 스킨리와 멀더에게 조사를 요구한 다음 후대 역사가들의 심판에 맡기는 바... 까지는 아니고 좌우시간 궁금하다.

이렇게 보강 해 보자.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로 나뉘어져 운영되던 당시 프로야구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해태가 전기리그 2위 안착에 실패, 페넌트레이스 직행 티켓을 못 잡고 4위로 지지부진 한 것을 바탕으로, 정치적 국면이 숨가쁘게 바뀌는 와중에 높은 정치의식과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던 광주시민들이 야구는 후기리그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고민들을 나누는데 집중했다고 말이다. 이 해석의 장점은 시즌 막바지에 별볼일 없는 팀(2002년의 롯데)의 홈 경기에서 관중들이 포퓰처럼 빠져나간다는 일반론에 포섭되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1987년 6월 30일부터 4일간 일의 광주구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6월 30일 OB가 2위 확정을 하면서 프로야구에 대한 열기는 한풀 꺾이게 되고 ,격동의 87년 한 가운데에서 야구는 정치보다 덜 재미있는 스포츠가 되어버렸다. 6월 30일부터 4일간 광주구장을 지킨 연인원 700명은 무엇을 하며 살고있을까?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3S정책의 노예라는 비판에 아랑곳 않고 광주구장을 지키고 있던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후, 아름답게도 해태 타이거즈는 후기리그 28승 3무 23패 2위를 기록, 전기리그 2위인 OB와 플레이오프에서 3승 2패의 혈투를 치르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한다. 해태는 전·후기리그를 통합 우승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4승 무패, 한국야구 역사상 최초의 한국시리즈 2연패, 최초의 선발타자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우승으로 광주시민들의 야구사랑에 대답했다. MVP는 4경기 12타수 6안타(2홈런) 4타점의 외야수 김준환.

낙서 실명제³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della at jinbo.net

낙서 실명제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 어느 해인가 이 나라가 국가적인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낙서"가 문제라는 언론 보도가 일어났다. 화장실, 음식점, 학교 담벼락을 비롯해 공공장소의 벽마다 가득한 낙서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누를 끼친다는 것이었다. 곧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는 낙서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국 방방곡곡 모든 벽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화장실처럼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낙서하는 것까지 정부가 어찌 해볼 도리는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현실적으로 수정했다. 벽이 있는 공공장소를 소유한 모든 업자는 입장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추후 낙서가 발견될 경우 낙서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록하지 않는 업자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법률도 만들어졌다. 낙서 실명제가 시행되자 낙

34 미디어오늘, 2010.02.24 게재된 글입니다.

서하지 않는다는 방문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낙서는 나쁜 것', '당당한 자는 이름을 밝힐 수 있다'는 정부의 성명과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수그러들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출입자를 관리하는 것이 건물 관리에 편리했기 때문에 큰 반대가 없었다. 어느덧 모든 시민들은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신분을 밝히는 데 익숙해졌다.

여기서 낙서는 '악플'이다. 우리는 악플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년 365일 인터넷 게시판에 입장할 때마다 신분을 밝혀야 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인터넷 실명제에 너무나 익숙할 뿐더러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까지 생각한다. 정직한 사람은 국가와 기업 앞에 언제든지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악플이 테러보다 나쁘다"는 공익 광고와 일부 언론의 여론 몰이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것이 근대 시민사회 이후 수립된 인권관이다.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더 나쁜 소식은 이렇게 확보된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국가가 사찰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정부가 수집하고 공유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소식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한 관행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이미 감시 사회이다.

2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의 '본인확인제' 대상을 발표하였다. 지난해보다 46개가 추가된 167개 사이트에 실명확인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발표에 따라 <미디어오늘>도 올해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올해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 언론에 실명제가 중복적으로 실시된다. 장담한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실명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정책에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독자 댓글과의 소통 문제가 더욱 절실할 소규모 인터넷 언론들이다.

전 세계 유일한 낙서 실명제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우신가. 아니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이신가. 슬쩍 사이버 망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어째서 이제는 실명제에 대한 작은 비판의 외침들도 모조리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가.

참고 :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웹 사이트 현황³⁵

<교육 1개>

ebsi.co.kr(한국교육방송공사)

<금융 8개>

kbstar.com(㈜국민은행), nonghyup.com(농협), shinhan.com(주 신한은행), moneta.co.kr(주팍스넷), hanabank.com(하나은행), myasset.com(동양종합금융증권(주)), wownet.co.kr(한국경제TV), lottecard.co.kr(롯데카드(주))

<미디어(인터넷언론 포함) 42개>

asiae.co.kr(주아시아경제신문), mydaily.co.kr(마이데일리(주)), seoul.co.kr(주서울신문사), heraldbiz.com(주헤럴드미디어), chosun.com(주디지틀조선일보), edaily.co.kr(이데일리(주)), joins.com(조인스닷컴(주)), inews24.com(주아이뉴스24), hankooki.com(주인터넷한국일보), munhwa.com(문화일보), donga.com(주동아닷컴), newsen.com(주뉴스엔미디어), mt.co.kr(머니투데이), fnnews.com(파이낸셜뉴스), mk.co.kr(매경인터넷(주)), zdnet.co.kr(주메가뉴스), sbs.co.kr(주에스비에스아이), etnews.co.kr(전자신문), sportsseoul.com(주스포츠서울미디어), pressian.com(주프레시안), hankyung.com(주한경닷컴), mediatoday.co.kr(미디어오늘), khan.co.kr(주경향닷컴), newdaily.co.kr(뉴데일리(주)), kukinews.com(국민일보), naeil.com(주내일신문), kbs.co.kr(한국방송공사), ebs.co.kr(한국교육방송공사), segye.com(세계닷컴), yonhapnews.co.kr(주연합뉴스), hani.co.kr(한겨레엔(주)), gooddaysports.co.kr(굿데이이엔에스), ytn.co.kr(주와이티엔), jknews.co.kr(한국재경신문(주)), imbc.com(아이엠비씨), consumernews.co.kr(소비자가만드는신문), cbs.co.kr((재)기독교방송), bloter.net(주블로터앤미디어), dt.co.kr(주디지털타임스), mdtoday.co.kr(메디컬투데이), ohmynews.com(주오마이뉴스), todaykorea.co.kr(투데이코리아)

35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2월 2일 발표. 2009년보다 46개 늘어난 총 167개 웹 사이트.

<비즈니스 9개>

samsungmobile.com(삼성전자 주식회사), wedisk.co.kr(㈜이지원), goodsflow.com(㈜굿스플로),
lotteshopping.com(롯데쇼핑㈜), tworld.co.kr(㈜에스케이텔레콤), lgtelecom.com(㈜엘지텔레
콤), show.co.kr(㈜케이티프리텔), lge.co.kr(LG전자㈜), lottetown.com(㈜롯데닷컴)

<생활/레저 11개>

logii.com (㈜파슬미디어), saramin.co.kr(㈜사람인HR), drapt.com(닥터아파트㈜), incruit.com(인
크루트㈜), jobkorea.co.kr(㈜잡코리아), career.co.kr(㈜커리어넷), bobaedream.co.kr(보배네트웍
스), alba.co.kr(㈜아르바이트천국), albamon.com(㈜잡코리아), r114.co.kr(부동산114㈜),
ezday.co.kr(㈜이지에이치엘디)

<쇼핑/경매 33개>

gmarket.co.kr(㈜인터파크지마켓), nseshop.com(㈜농수산홈쇼핑), auction.co.kr(㈜옥션),
aladdin.co.kr(㈜알라딘커뮤니케이션), 11st.co.kr(㈜에스케이텔레콤), halfclub.com(㈜트라이씨
클), interpark.com(㈜인터파크INT), oneday.co.kr(㈜원어데이), cjmall.com(㈜씨제이홈쇼핑),
ogage.co.kr(㈜트라이씨클), lotte.com(㈜롯데닷컴), 10×10.co.kr(㈜텐바이텐), shinsegae.com(㈜
신세계), wizwid.com(㈜위즈워드), gsshop.com(GS홈쇼핑), njoyny.com(케이티커머스㈜),
lotteimall.com(㈜롯데홈쇼핑), chonggafood.com(대상FNF㈜), hmall.com(㈜현대홈쇼핑),
cultureland.co.kr(㈜한국문화진흥), yes24.com(에스이십사㈜), 1300k.com(㈜천삼백케이),
dnshop.com(㈜디앤샵), cjonmart.net(씨제이제일제당㈜), danawa.com(㈜다나와), otto.kr(OTTO
쇼핑리미티드㈜), akmall.com(에이알디홀딩스㈜), bb.co.kr(㈜베스트바이어), enuri.com(에누리
닷컴㈜), lottedfs.com(㈜호텔롯데 롯데면세점), kyobobook.co.kr(㈜교보문고),
stylenanda.com(㈜난다), akmembers.com(애경산업㈜)

<엔터테인먼트 28개>

pmang.com(㈜네오위즈게임즈), cgv.co.kr(CJ CGV(주)), bonus365.co.kr(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
pdbox.co.kr(주)나우콤), tvreport.co.kr(주)파이미디어), plaync.co.kr(주)엔씨소프트),
iprosumer.co.kr(SK마케팅엔컴퍼니(주)), mgoon.com(주)엠군미디어), kixx.co.kr(GS칼텍스),
mnet.com(엠넷미디어(주)), nexon.com(주)넥슨), netpoints.co.kr(주)넷포인트엔터프라이즈),
netmarble.net(씨제이인터넷(주)), ppomppu.co.kr(뽀뿌), hangame.com(엔에이치엔(주)),
mgame.com(주)엠게임), gomtv.com(주)그래텍), diodeo.com(주)디오데오), okcashbag.com(SK마
케팅엔컴퍼니(주)), gameangel.com(주)휴먼웍스), melon.com(로엔엔터테인먼트),
lottecinema.co.kr(롯데시네마(주)), pandora.tv(주)판도라TV), ipop.co.kr(주)아이팝 미디어),
afreeca.com(주)나우콤), pullbbang.com(풀빵닷컴(주)), maxmovie.com(주)맥스무비),
playforum.net(주)플레이포럼)

<인터넷서비스 18개>

tistory.com(주)다음커뮤니케이션), kdisk.co.kr(주)웹플러스), egloos.com(SK커뮤니케이션즈(주)),
bigfile.co.kr(주)에이치씨비즈온), cafe24.com(심플렉스인터넷(주)), filecity.co.kr(주)미디어플러스),
wzdfactory.com(주)위자드웍스), megafile.co.kr(주)케이티에스컨텐츠), clubbox.co.kr(주)나우콤),
fdisk.co.kr(주)에프앤커머스), filenori.com(주)선한아이디), jumpdisk.com(주)파일짬커뮤니케이션
즈), sharebox.co.kr(우리개발), zfile.co.kr(주)하이브), ondisk.co.kr(주)에이치제이커뮤니케이션),
mfile.co.kr(주)와이즈휴먼네트웍스), hidisk.com(하이디스크), pruna.com(주)프루나닷컴)

<포털 17개>

naver.com(엔에이치엔(주)), korea.com(주)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daum.net(주)다음커뮤니케이
션), enclean.com(에너지(주)), nate.com(SK커뮤니케이션즈(주)), srclub.com(주)인비전커뮤니티),
kr.yahoo.com(야후코리아(유)), kr.msn.com(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paran.com(케이티하이텔
(주)), sayclub.com(주)네오위즈인터넷), hanafos.com(하나로드림(주)), chol.com(주)데이콤멀티미디
어인터넷), freechal.com(주)프리첼), sportalkorea.com(스포탈코리아닷컴), dcinside.com(주)디시
인사이드), cetizen.com(주)베리엠앤씨), dreamwiz.com(주)드림위즈)

section 11. 진보넷의 고민들

-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 권력전쟁
_정민경 ^ 52
- 진보넷의 고민 : 함께 해 주세요~_김승욱 ^ 57
- 진보넷 이종희 대표 면회기_김승욱 ^ 64

section 11.에는 진보넷이 활동하면서 부딪히는 고민과 생각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권력전쟁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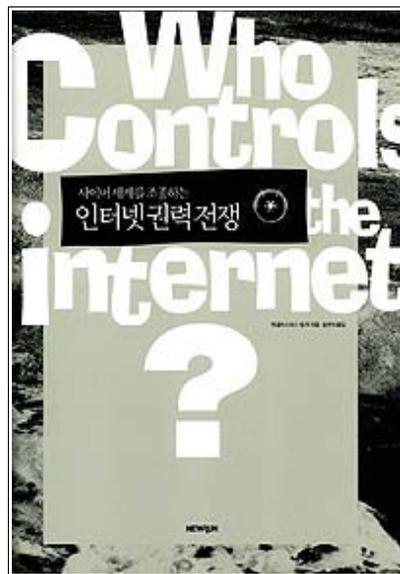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jmk6 at jinbo.net

전 세계 인구 약 68억 명 중 10억 명,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 명 중 34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66%가 인터넷의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면서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법이 없었던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체계가 만들어졌을까?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 권력 전쟁’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36 본 글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례 내부 세미나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수정한 글입니다.

인터넷은 국경 없는 하나의 세계?

인터넷이 발달하자 사람들은 인터넷이 국경을 허물고 지리적 구분이 없는 하나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막고 서있는 커다란 장벽들이 존재했다. 언어, 배경과 능력, 요구의 차이, 각국의 기술발전 속도, 국가별로 이뤄지는 법 집행 등의 문제들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 나라의 이용자들은 역사, 문화, 지리가 다르고 이에 맞는 콘텐츠도 달라진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이런 차이를 반영해 각 나라, 또는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자국 내 법에 따라 통제하기도 한다. 책에서 소개하는 야후사건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나치물품을 경매할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나치물품 경매는 불법인, 즉 각 나라의 법이 다르고 처벌정도가 다른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경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 권력전쟁, 책 콜드스미스, 팀 우 지음, 송연석 옮김>

사이버 공간에도 법이 필요할까?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초창기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는 별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가상 세계의 사람들에게 정치의식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 '다중 사용자 게임' 즉 '머드'라 불리던 인터랙티브 게임 속에서 '미스터 벙글'이란 id를 가진 회원이 두 여성 회원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두 여성회원은 마치 직접 강간을 당하는 듯한 고통과 치욕을 느꼈고 결국 미스터 벙글은 한 유저에 의해 회원권을 박탈당했다. 이 사건으로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가상 커뮤니티를 지배할 규칙이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가상공간에 규칙이 필요하다면 이 규칙은 누가 정하고 규칙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에 존 페리 발로우는 사이버 공간에 실제 갈등과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찾아내 우리 식으로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사회계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공간 전용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유해 정보와 범죄

들을 책임지고 규제하는 주체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정부가 나서서 맡게 되었다.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국민들은 정부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피해를 예방하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위해를 차단해주길 원한다. 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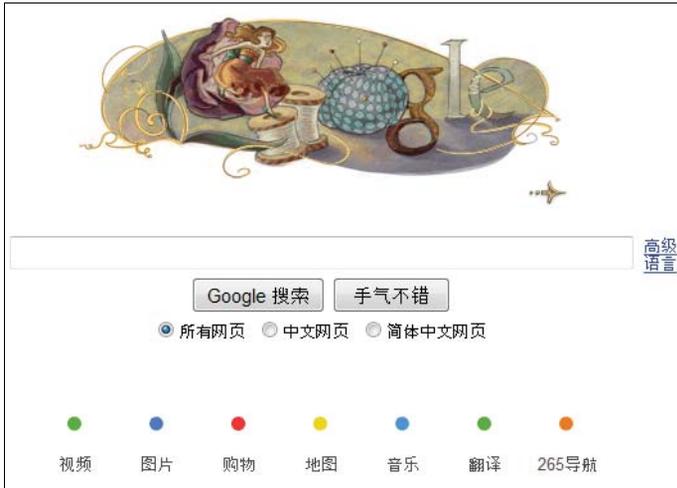
이에 정부는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불법 행위를 자국중개자 통제, 운송중개자 통제, 정보 중개자 통제, 금융 중개자 통제, 도메인 네임 통제와 개인의 법 집행을 통해 견제한다.

구글은 미국에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검색결과에서 특정 페이지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매달 30여 통씩 받고 있으며 이런 요청에 대부분 응하고 있다. 이 페이지들 중 상당수는 미국 법의 힘이 직접 닿지 않는 미국 밖에 있는 서버에 있다. 그러나 정부 혹은 그 법을 발동한 사람들은 자국 내 검색엔진을 추적함으로써 해외 콘텐츠 공급자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보 중개자 통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도 쓰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정보 중개자가 검색엔진을 검열함으로써 콘텐츠를 통제했다면 현재는 보다 한 단계 진화해 정보 중개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직접 통제를 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제도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임시조치제도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2항 (정보의 삭제요청)은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을 포털이 30일 동안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법 집행은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목적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효과와 탈법행위 소탕을 위한 전략의 일부라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의 문제로 파일공유에 대해 불특정 개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개인통제 효과는 바로 드러났다.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원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몇몇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자 요즘은 블로그에서 음원공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모든 개인을 통제하지 않아도 위축효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제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중국은 극단적인 통제 사례인 동시에 인터넷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계가 생기는 원인과 그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게이트웨이라 부르는 지점들에 시스코 장비를 설치해 검문소 역할

을 하라고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터넷 메시지나 토론을 하는 토론방을 내부 검열하는 내부 정보 통제 프로그램도 이용한다고 한다. 최근 구글은 중국에서 철수해 중국 사이트 서비스를 홍콩으로 옮겨 검열되지 않은 검색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중국철수 사건을 관심의 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중국의 사례는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가 가진 단점이 인터넷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글은 2010년 2월 23일 경영상의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한다 밝혔다.
google.cn을 접속하면 google.hk(홍콩)으로 이동된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갖고 있는 숨겨진 장점들도 있다. 법이 정직한 이용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정부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통제는 인터넷 세계를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준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 판단 기준과 주체

인터넷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포르노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유통되고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1996년에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인터넷 상에서 18세 미만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불건전한 성적 내용이나 이미지 전송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건전성’이란 모호한 말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와는 무관한 중요한 의사표현까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으로 인한 제약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비춰졌다. 1997년 6월 미국 대법원에서는 ‘범위가 넓고 모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미성년자의 보호 못지않게 성인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 통신품위법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2001년부터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있다. 청소년들을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규제했다. 하지만 당시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로 규정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인터넷 검열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법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자율등급제라고는 하지만 감시의 기준, 판단, 처리의 모든 것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병성 목사 시멘트발언 사건의 판결 당시 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고민

이 책은 인터넷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영토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통제가 갖는 의미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정부의 통제사례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다. 인터넷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며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법의 해석에 따라서 특권층의 이익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법 체계는 정권에 따라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암묵적으로 검열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위험 소지가 따른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당한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법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진보넷의 고민 : 함께 해 주세요~



김승욱,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hellomoya

요즘 진보넷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예요. 고민만 많아서 소화가 잘 안되지요. 그래서 함께하면 소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³⁷ 올려봅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드문드문 드는 생각도 있으면, 댓글/트랙백/링크/리트윗 등 부담없이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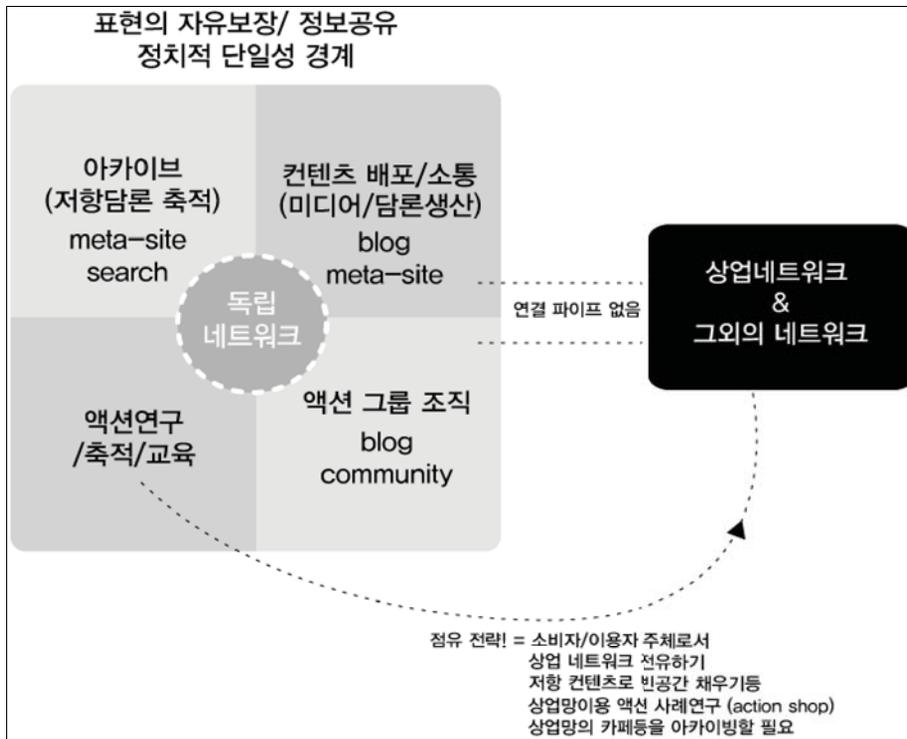
고민1 : 문제적 공간을 만들기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독립' 네트워크 모델이었다. 불온한 것들은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로 모여라! 근데 어떤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술이렇게 있을까? 넷에서의 문제적 공간은 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넷 안에서 암적인 존재로 스며들어감으로써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의 모델은 모두 취소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이든 트위터이든 정치

37 <http://blog.jinbo.net/jinbonet/?pnum=5>

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 실제로 '주어진 커뮤니티'로서 독립네트워크는 '구성되는 커뮤니티'로서의 바깥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가고 있으며,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네트에 대해서 고민하는 운동사회 전체 또 활동가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또 운동이 어떻게 네트에 접속되어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진보넷을 진지로 활용하고 거쳐 감으로써? 아니면 포털이나 트위터에 직접 개입하고 소통함으로써? 어떤 것이 더 좋은 운동이고, 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작년 용산의 1년, 진보넷이 더 적극적으로 결합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고 하고 싶어 했을까? 어떻게 인터넷에 개입하려고 했었을까? 진보넷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통해서? 아니면 무관하게?



<간단하게 그려본 독립네트워크모델>

반대로 운동을 고민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인터넷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진보넷이 문턱을 낮추고(어떻게?), 개입 가능한 형태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듯.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제공되는 형태라는 것은 금방 식상해지고 관성화되고 재미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식의 제공모델은 지속 불가능한 것일까? 개입방법이 많이 열려 있을 수록 창발성이 꽃 필 수 있겠지만, 개입하기 어려워지는 것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고 서명도 해주고 후원모금도 해줘요. 트위터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라고 제공하는 형태에는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겠지만 금방 재미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별 다른 형태 없이 블로그(혹은 또 무언가 범용적인)만 제공한다면 거기서 서명도 받고 후원도 받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나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테지만, 정작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 것도 못하게 될 수도. 어떤 식의 모델이 좋을까? 앞의 것? 아니면 뒤의 것? 아니면 둘 다? 혹은 중간의 어디쯤?

한편으로 네트에 바로 섞인다는 것은, 이런 색깔의 소비-놀이를 모아서 이런 색깔의 메타적 가치생산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일 수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진행되는 소비-놀이는 말 그대로 전체이고(올블로그는 all이고) 색깔로 필터링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색깔의 농도를 더 짙게 해주지는 않는다. 진보넷이 하고 싶은 것/해야 하는 것은 이 부분? **색깔의 농도를 짙게하기!** 그럼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시, 어떤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술이란게 있을까? 진보네트워크가 열린 공간이면서 어떤 정치색을 지향할 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정치색들이 꼬여서 이곳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런 기술이 있는가? 기술이 아니라면 그런 정치가 필요한가?

정치적인(혹은 비기술적) 측면에서,

- 진보넷이 그 동안 쌓아온 명성/분위기/콘텐츠/사람들
- 진보넷jinbo.net이라는 이름
-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기

기술적인 측면에서,

- 우리가 가지고 있는(늘 생산해내는) 콘텐츠에 적합한 툴을 제공하기 (성명서 폼, 성명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뉴스레터, 발제문 폼 등등)

또 뭐가 있을까?

고민2 : 커뮤니티(사람 사이의 관계)

두 가지 방식의 커뮤니티가 있다. 첫번째는, 주인에 의해 선포되고 손님들이 초대되는 방식. 가칭 '카테고리적 방식' 사실, 진보넷 전체도 그렇고, 진보블로그도 그렇고, 웹링도 그렇고, KPD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두들 해오던 방식이고, 우리도 해왔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참여자-노드들에 의해 알음알음 확장되어 그 노드의 수만큼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방식. 가칭 '태그적 방식' (카테고리적 방식에 대비하여 이렇게 쓴 것인데, 사실 별로 어울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태그를 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카테고리가 있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밀도가 낮다). 조금씩 겹치고 조금씩 다른 커뮤니티. 동일한 것은 한 개도 없는 커뮤니티. RSS리더기로 메타사이트도 없이 친구가 되는 각자의 블로그스피어가 그렇고, 그것을 잘 캐취하여 팔로우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트위터가 그렇고.

우리가 진정 불온한 노드(콘텐츠, 사람)들의 허브이고 싶다면,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문제적 공간을 만들자! 이곳에는 이런 정치색이 있습니다." 라고 컨셉을 잡는 것은 첫 번째 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전체적으로) '문제적 공간'이 되도록 할 수



<수많은 Social Network Service>

있는 방법(기술/정치)이 있는가?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문제적 공간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모델로는 별로 모일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고, 노드들이 알아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다보면 어느 날 봤을 때 "어 저기 문제적 공간이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하는 듯.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 다시 고민1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듯.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정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성하도록 할 수 있을까? 즉, 노드(사람)와 노드(사람)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 그냥 생각나는 것들로는...

오프라인-친구, 온라인-친구 (적극적인 상호피드백), 댓글 단 사이, 호감-눈팅, 비호감-눈팅, '지나가다' 사이 ...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관계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기 위해서 단순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3 : 보여주기/아카이빙(콘텐츠 사이의 관계)

콘텐츠-노드와 콘텐츠-노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만 얘기하자면, 태그가 있다. 같은 태그가 달린 콘텐츠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채널의 검색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 관계는 매우 얇고 유기적이지 못하다. 카테고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로는 어떤 관계가 가능할까?

- 트랙백
- 링크/핑백
- 하나의 논쟁으로 묶이는 콘텐츠 (예전에 있었던 트랙백 모델?)
- 하나의 소재(영화,책)로 묶이는 콘텐츠
-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묶이는 콘텐츠 (맑스주의 경제학?)
- 노드와 피드백(댓글, 트윗, 트랙백) 등의 관계
- 같은 태그 포스트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희미해진다. 예컨대, 지금 '민노당'이라는 태그는 서버 문제로 부글부글하지만 이 태그가 전체 시간을 관통할 때 관련 글은 방만해진다)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단순화해야할까? 이 부분은 사람과 사람 관계보다 어렵다. 누가 관계를 맺어주는가? 자동화가 가능할까? 아니면 반수동? 혹은 완전 수동? 수동이라면 누구의 노동?

콘텐츠-노드와 사람-노드의 관계도 있을 듯

- 콘텐츠와 글쓴이
-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준 사람
- 콘텐츠를 공감한 사람
- 콘텐츠를 싫어한 사람
-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퍼 나른 사람

다시 위와 똑같은 질문(또 뭐가 있을까?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단순화해야 할까?)

그리고 쌍 콘텐츠보다 관계기반 콘텐츠가 훨씬 의미가 있다. 포털에서 만나는 콘텐츠와 아는 사람이 추천해준 콘텐츠는 비록 같은 것이라도 다르게 다가와. 간증트윗 "트위터 식으로 정보를 입출력... 뭔가 이전과 다른 게 있는 듯. 특히 뉴스를 내가 입력 받는 방식. 일상과 사람 관계 속에서 "맥락"있게 만나는 뉴스들이 그냥 포털이나 신문지상에서 만나는 것 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다가온다. 짧은 코멘트와 정보가 흘러온 경로."(@map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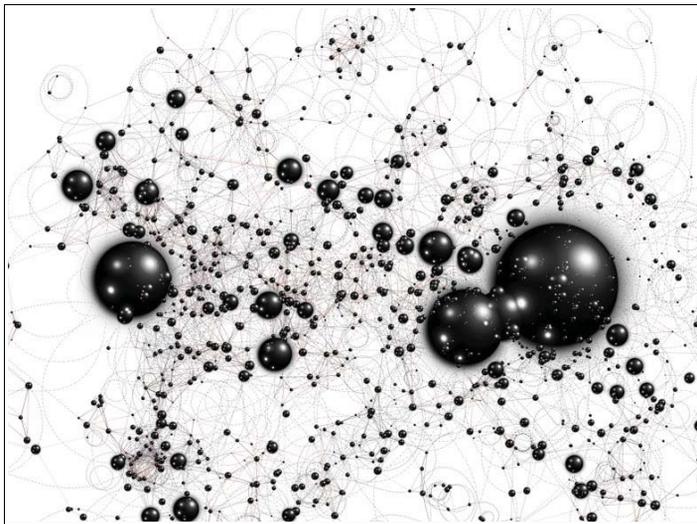
고민4 : 숨어있는 콘텐츠는 무엇?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데, 몰래만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은 무엇? 날 것 그대로 혹은 가공된 형태로 네트에 올려보내면 가치 있을 콘텐츠는 무엇?

성명서, 뉴스레터, 발제문, 토론자료, 투쟁영상, 투쟁사진, 블로그-포스팅, 정치평론? ...

재밌는 것이 별로 없다. 특히 '수다'에 해당하는 영역이 없다. 어쨌든 이 콘텐츠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끌어내야 되고, 수다도 하도록 해야 되고. 수다는 어떻게 가능할까? 또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호홉이 길어서 네트에 어울리지 않는 콘텐츠들(발제문, 토론자료 등. 흔히 자료실에 있는 자료)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까? 그대로? 아니면 분할해서? 아니면 2차 가공되어서? FTA 때 에프키라 활동을 떠올려보면, 내

용을 생산하는 사람과 별도로 그 내용을 인터넷용(아고라체)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었다. 실제로 그 작업이 훨씬 빠졌고, 또 그것 때문에 가능했고. (내용을 생산하는 자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그런 번역을 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해야 하나? 어려운 글(기본소득 소개, 패킷감청 소개, 경제위기 분석, 용산과 자본주의 문제 등등)을 생산하는 사람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관심 있고 내용도 좀 알고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번역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번역하는 사람이 재미있을까? 누가 하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1차문헌(?)에 일부를 발췌하면서 자기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해주면 될까?(트위터식 리트윗) 너무 얇은가? 뭐가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전해질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노드들의 망>
 이미지출처 <http://www.complexification.net/>

또 콘텐츠의 형식이 많을수록 그것을 '노드화'(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퍼 나르게 하고, 아카이빙 하고, 분류하고, 활용하려면, 피드백 가능하도록 하려면. 노드화가 필요해! 혹은 처음부터 입력/생산은 단일한 형태로만 가능하도록? (트위터 모델, 무조건 단문140자) 다양한 콘텐츠 형식에 맞게 모든 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까? 다시 고민1에 나왔던 "쉽게 입력하고 창발성

없는 Vs. 열려있지만 상상력 부족한" 딜레마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고유한 콘텐츠의 형식은 무엇인가? 어떤 차별화된 형식이 있는가? 예를 들어, 투쟁사진은 소중한 콘텐츠이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그냥 사진이고 진보넷에 소화되는 것보다는 플리커든 피카사든 이런 곳에서 소개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반면에 성명서는 그냥 문서라기보다는 나름 차별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이다. 그 형식을 발굴해낼 때 기술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진보넷 이종희 대표 면회기



김승욱,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hellomoya

작년 한 해 용산범대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진보넷 이종희 대표는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작년 봄부터 순천향병원에서 수배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감금상태로 지낸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행히도 순천향병원에서 명동성당으로 옮기면서 또 이번에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이 후로 점점 몸 상태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명동성당을 나올 때 월요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차에 타면서까지 함께 구호를 외쳤죠. 용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자진출두인데, 사복들은 서로 잡아가려고 지들끼리 경쟁하면서 구속영장까지 내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 그거죠.



<장례식을 치루고 명동성당에서 나와 자진출두를 하는 삼인>

아무튼 지금은 서울구치소(사당에서 과천지나 인덕원인가 하는 곳에 있어요) 수감번호 15번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은 한 차례 진행되었고, 다음 재판은 3월말이라고 하네요. 진보넷에서는 월요일마다 면회를 갑니다. 면회시간은 딱 10분. 그것도 유리로 막혀있는데 마이크와 스피커가 꺼지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한번은 새로 아이폰을 장만한 ㅇㅂ(@antiropy) 활동가가 대표에게 아이폰을 자랑하기 위해 주머니 밖으로 꺼냈다가 면회실 지키던 간수가 별떡 일어나고 분위기 험악해지는 해프닝도 있었죠. 아이폰이 뭔지 ...

서울구치소에 들어서면 '교화공원'이라는 팻말과 함께 삭막한 별판이 나옵니다. '교화' 사전을 찾아보니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이라는 뜻이네요. 영어로는 'reform'이네요. 이곳은 삶을 다시—만드는(re—form) 곳인가 봐요. 덕분에 감옥 밖의 모든 삶들도 하나의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도덕', '법', '태도', '성적', '정상'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니 이 볼품없는 공원이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었군요. (관련글: 유전자권력 @hellomoya)



<볼품없는 교화공원: 그러나 여기서 우리 삶의 방향이 만들어진다>

아무튼 재판도 잘 진행되어야하고, 감옥에서도 빨리 나와야할텐데. 정말 도주할 데도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왜 구속해놓고 있는 것인지. 그 와중에 진보넷은 신중하게 엠티나 한 번 가보려고 했으나, 결국 대표에 대한 의리를 놓지 못하고 대표가 나온 뒤에 엠티를 가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진보넷 역사상 엠티가 연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나. 호호.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혹시 면회가 땡기시는 분은 매주 월요일 진보넷 활동가들이 면회 가니까 함께 가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02-774-4551 혹은 덧글로 신청가능, 매주 선착순 5인) 면회는 짧은데 그 앞에서 먹는 점심시간은 길다나. 어쨌든 10분 동안은 함께 배고프다가 뒤돌아서서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하나의 코스(전통)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상 대표소식을 전하며 오랜만에 진보넷 불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한 일 없다! 하루 빨리 석방하라!"

ella 4hacke bright igoomy ikd01 next421 **positro**

nenmai **wangkm** twofus shincl eeseob_n mari supul2

SHHA kambe anggoo10 **peacepia** Hserin tae21 may

jinbo13 delphy action horong arcase meiste rainme

young82 redgan damon abird33 seapear underis **anbada01**

angle tsn eejoon **homin99** nojisimi

이 분들의 뒤를 이어 후원회원이 되고싶으시면...

쌀을 주셔도 되고,
반찬을 주셔도 됩니다.

쓰지 않는 이불을 주셔도 되고, 알콜(?)을 주셔도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셔서 지속적으로 으랏차차 기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계정**, 즐겁고 풍성한 내용을 담은 **계간지 <액트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독립 영화관 할인 및 무료 입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http://center.jinbo.net/member/new.php> 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057-036794-04-019
예금주 진보네트웍

정보의네트워크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지 10년.

이는 것, 그 모두가 기록되는 감시사회로 진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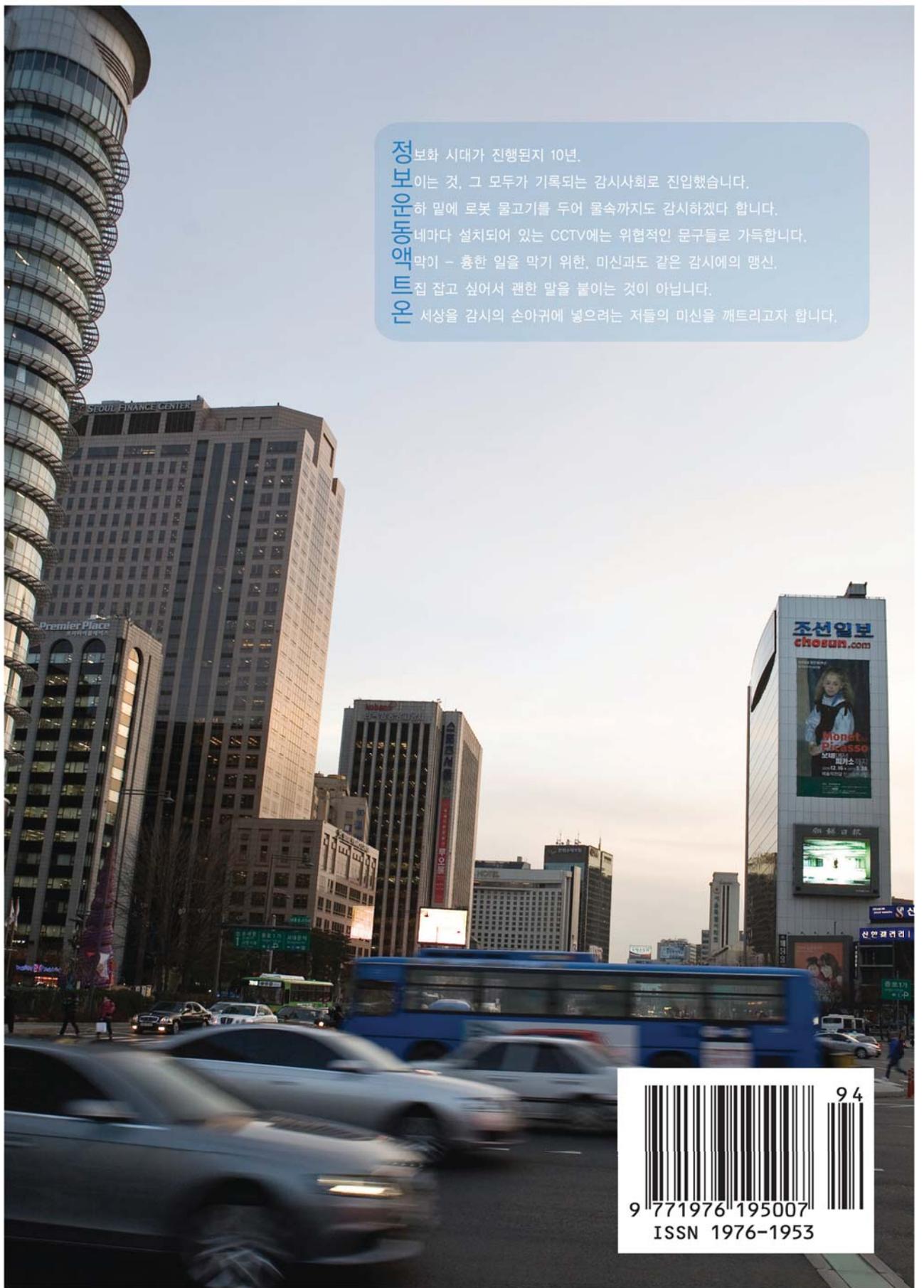
하 밑에 로봇 물고기를 두어 물속까지도 감시하겠다 합니다.

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위협적인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막이 - 흉한 일을 막기 위한, 미신과도 같은 감시의 맹신.

집 잡고 싶어서 괜한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상을 감시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저들의 미신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94



9 771976 195007

ISSN 1976-1953